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 일시 | 2025. 5. 20(화) 10:0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국회 전현희 의원실 /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 L-ESG평가연구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 주관 :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 건강돌봄시민행동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국제청년환경연합 /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 한국환경기술사회 ■ 후원 : 오마이뉴스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Ⅰ 일시 Ⅰ 2025. 5. 20(화) 10:00 ~ 12:30

Ⅰ 장소 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책토론회

1 좌장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2 주제 발제

「쓰레기대란 해법」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장기석(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3 지정 토론

-이제훈(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성은경(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

-김선홍(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임창순(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한달수(경인일보 기자)

4 종합 토론

참가자 전원

■ 주최 : 국회 전현희 의원실/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 주관 : 민주주의시민연대표럼/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제청년환경연합/ 환경자원순환업종대책위원회/ 한국환경기술사회

■ 후원 : 오마이뉴스

행사일정

시간	내용
10:00~10:20 (20분)	[개 회 식]
	○ 사 회 전제완 민주주의시민연대 운영본부장 ○ 개회사 및 인사말 전현희 국회의원 박승흡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이사장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축 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10:20~10:50 (30분)	[주제발표]
	「쓰레기대란 해법」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10:50~12:10 (80분)	[토론 및 질의응답]
	○ 좌 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토 론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한달수 경인일보 기자
12:10~12:30 (20분)	[종합토론 및 마무리]
	○ 종합토론 참가자 전원

목 차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인사말)

전현희 국회의원	9
박승흡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이사장	11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14

축 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8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

주제발표

「쓰레기대란 해법」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23
----------------------------	----

지정토론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109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115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	121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127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133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141
한달수 경인일보 기자	147

개회사



전 현 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는 저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경실련,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공동 주최해주신 박승흡 이사장님과 박남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 유관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발제를 맡아주신 장기석 전무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제훈 환경부 과장님, 김경민 입법조사처 박사님, 성은경 위원장님, 김선홍 회장님, 백진기 회장님, 임창순 사무국장님, 한달수 기자님 등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1만 257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800톤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소각장의 처리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우며, 이는 심각한 환경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2030년부터 전국 직매립 금지가 예고되어 있어, 각 지자체는 시급히 대체처리시설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소각장 준공 시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단 2년의 유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각장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점도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환경 현안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정책적·입법적 해법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국회의원 전 현 희



박 승 흡 이사장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안녕하십니까.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승흡입니다.

“시민 속으로,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시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끌어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긍지와 노동의 존엄을 외쳤던 전태일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문명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멘트환경문제 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남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환경 문제와 주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 특히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시멘 공장 주변은 이미 환경오염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매연과 분진으로 인하여 과수원의 과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무들은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환경오염이 미래에 닥칠 재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의 목숨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 그것이 지금 시멘트공장 인근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뚜렷한 경종을 울립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총 5,675명의 수검자 중 무려 909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병률이 16%에 이릅니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민간 소각장보다도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시멘트공장은 단순한 산업 시설이 아닙니다. 그 규모는 민간 소각장보다 훨씬 크며, 배출가스의 양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가치를 비용과 이윤의 종속변수로 전락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환경위기, 사회적 양극화라는 복합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ESG를 고려한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SG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전태일재단은 이러한 물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건강하게 숨 쉴 공기, 맑고 깨끗한 물,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의 권리이자 기업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전태일재단은 노동자의 권리를 현장에서 지키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동’은 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우리의 일상과 살림과 삶에 직결된,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전태일재단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귀 기울이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나은 법과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민 속으로 전태일’은 다짐이고 곧 실천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손을 잡는다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20일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 승 흡



박 남 화 위원장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남화 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신 국회 전현희 의원님과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내실 있는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성심껏 준비해 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내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직매립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을 통한 쓰레기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스러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시멘트’의 견잡을 수 없는 폐해 실태를 알고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제천을 비롯해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단양 등 6개 지역은 시멘트공장이 내뿜는 각종 공해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량을 계속 늘려갈 경우, 우리 고장은 대기환경 뿐 아니라 토양오염, 수질오염의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시멘트산업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멘트 벨트’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혜와도 같은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을 그대로 둔 채 쓰레기 사용량을 늘려가는 것은 그간 관계 전문가들과 수많은 언론에서 제기한 시멘트공장의 환경문제, 건강문제를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곳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시멘트공장으로부터 우리 고장과 주민, 우리 국민과 나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20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 남 화

축사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전현희 최고위원님과 (시민속으로)전태일 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만257t으로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각 등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과 매립장의 신설과 증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소각장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쓰레기 처리체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후재앙의 시대, 물자 및 에너지의 생산과 폐기는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폐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자원의 비중을 늘리고 자원순환 체계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생활폐기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확립하고, 민간소각장 활용 등 실현 가능한 정책과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 찬 대

축사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전현희 위원장님,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님,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남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이 기존에 매립해 왔던 폐기물 처리 문제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하던 공공 소각장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국가 과제로 부상한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지 기술적 해법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감, 갈등의 조정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과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공소각장 신·증설과 관련한 전국적인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특히 귀한 시간 내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 성 준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시멘트환경문제 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김미화 이사장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폐기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환경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무겁고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는 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왔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은 주민 갈등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고, 자원순환과 감축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 강화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수익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이 중심이 되는 자원순환 체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될 제안들이 단순한 정책 옵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 호 영

【 주 제 발 표 】

「쓰레기대란 해법」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장기석 전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쓰레기 대란 해법」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5.5.20

장기석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이사

목 차

I. 개	요	29
II. 인천시	입장	30
III. 서울시	입장	37
IV. 환경부	입장	45
V. 마포구	주민 입장	52
VI. 시멘트	업계 입장	57
VII. 민간	소각업계 입장	86
VIII. 결	론	105



▲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중인 수도권매립지



▲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 생산 및 공급하는 민간 소각시설

- 직매립 금지는 목전에 다가와 있고 대체매립지 확보는 요원하고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 누군가는 닥쳐올지 모를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 금번 토론회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관계되어 있는 각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견, 정책 발표에 휘둘리는 직매립 금지 대상 폐기물이 아니라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인천시 입장

1 배경 및 문제점

-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공공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표류되고 있어 2026 이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2 주요 진행사항

- 시에서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확충이 불가능할 시
①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 ②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페널티 부과, ③민간소각시설의 활용을 계획



공공소각시설 확충

▶ 인천시(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

- ☑ 직매립 금지 대비 군·구 폐기물처리 대책
- ☑ 군·구별 소각장 설치 관련 조정·지원
-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 ☑ 주민의견 수렴
- ☑ 입지 인센티브 마련



소각장 확충 불가능시 대책 ▶

인천시·구

-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
- ☑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의 페널티 부과
- ☑ 민간소각시설의 활용

3 입장

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불가능할 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파봉도 고려 필요

나.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주민 부담률 현실화(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를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주민 인식 변화 추진

(단위 : 원)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20	2024
20ㄸ	620	620	620	620	620	750	620	750	750	750	750	750	620	750	620	620
주민부담률 (%)	51		54		44		68		86		63		52		71	

다. 인천 지역 내 민간소각시설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활용 방안 모색(인천 지역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등)

〔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인천시 공공소각시설 확충 불가능
 “ 민간소각시설 활용 ” 〕

1 타 지자체 생활쓰레기의 인천지역에서의 소각시 반입협력금 협의(2028년 이후) ⇒ 민간시설에 대한 강제 불가

2 인천지역 민간소각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 ▶ 여유용량 파악(최대 가동을 기준)
- ▶ 허용대상폐기물 종류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 민간소각시설 운영관리 방안 통일화(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협의기준)
- ▶ 처리단가의 조정
- ▶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공공소각시설로서의 책임감, 주민지원?)
- ▶ 인천지역 생활폐기물 우선처리를 위한 조례제정

라. 인천시, 인천 시민·사회단체,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필요, 유예 결사 반대 입장

	보도 참고 자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4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담당자	·매립종료팀장 김은진 ☎440-8271 ·담당자 최미영 ☎440-8272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L공사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 관련 인천시 입장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SL공사는 지난 12월 13일 보도자료(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는 SL공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의도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음.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울 따름임.

인천시는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힘.

아울러, SL공사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성명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김효정 사업과장 439-0493) / 인천경실련(김나은
사업팀장 423-2950) /
검단시민연합(주경숙 공동대표 010-4211-7469) / 서구발전협의회(전기풍
사무총장 010-5040-9831)

시행일자 : 2025년 4월 16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성명<4자 협의체>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행’에 대한 입장

시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 대선 전에 해결방안 찾아야!

- <4자 협의체>, 응모 주체 민간 확대 등 ‘공모 조건’ 완화해 이달 중 ‘4차 공모’ 시행 전망! -
- 때 놓치면 영구화될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인천시장 협력해야! -
- 환경부는 영구화 의심되는 송병역 사장 월권적 발언, 2026년 직매립 금지 유예 등 조치해야! -

1. 인천의 여야 정치권과 유정복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전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추진하는 ‘4차 공모’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를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5월 중에 시행할 전망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 기간의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공모 조건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공모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최소 부지 면적, 90만㎡보다 축소 ▲부지 경계에서 2km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 삭제 ▲응모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 등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의견들을 모으며, 4차 공모의 성공 가능성을 높

이려고 했다. 또한, 정치적인 격변에도 공모 시기를 상반기 중으로 맞췄다.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할수록 단체장 후보들의 대체매립지 공모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조속히 공모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4자 협의체>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추진이 성공하도록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약속했던 총리실 산하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4차 공모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전담기구> 설치가 병행돼야 한다. 당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약속했다(표 1).

< 표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 공약 >

■ 그린뉴딜 도시재생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시민에게 친환경 공간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인천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매립지 종료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단지화 생태공원 조성 추진
--	--

또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양당에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으로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공약을 제안했고, 그들은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은 엄존하기에, 바로 지금 <전담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만약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향후 대선이나 지방선거 공약으로 염두에 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주민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인천 정치권과 시장은 4차 공모와 <전담기구> 설치 문제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월권적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유보할 수 있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유예 조치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최근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논란이다. 환경부의 정책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산하조직의 기관장이, 환경부가 서울·경기·인천의 시·도지사과 합의한 <4자 합의> 사항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월권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 관할권의 이관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이 엄존한 상황에서,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모를 리 없는 공사 사장이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자칫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의도를 갖은 양, 주민과 인천 시민들이 오해할까 걱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송 사장의 발언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을 피하려 해서 논란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하자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겠다는 의중을 비치고 있다. 4차 공모에서 확보해야 할 대체매립지는 소각재만을 반입할 수 있는 매립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직매립 금지’다. 그래서 지자체는 소각장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게 되면 그만큼 대체매립지 확보 시기는 늦어지는 것이다. 여러 핑계로 연기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기존 수도권매립지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견지해온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유보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유예 문제는 재고해야 한다.

정부와 인천 정치권은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현안을 더는 늦추지 말고, 올해 상반기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치권은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또다시 재탕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환경부도 새 정부의 첫 환경 업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라는데 부담이 있는 만큼, 4차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생안정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Ⅲ

서울시 입장

1

입장

- (직매립금지 입장) 서울시에서는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2030년까지 사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인천in.com

오세훈 "수도권매립지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

- (마포소각장 증설 입장)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말 가동 목표로 일 1,000톤 규모의 마포소각장 신설을 추진

* 서울시는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도서관과 실내체육시설 등과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 시설 지상부에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도시 명소로 조성

2

배경

- 현재 서울시는 마포(750톤), 강남(900톤), 노원(800톤), 양천구(400톤) 등 4곳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20여년 이상된 시설로써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변화 및 시설 노후로 인해 시설용량 대비 약 77%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실시(‘25.5.13)

-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평균 3,200톤으로 서울시 내 소각장 4곳에서 약 2,200톤을 처리하고 소각하지 못한 1,000톤의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는데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 되면 일 평균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새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

3 문제점

-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 예정지인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로 시에서는 자원 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 것을 밝힌바 있음에도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설치 반대
-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23년 8월)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25년 2월 항소) → 마포소각장 증설 추진이 장기화될수록 쓰레기 대란 우려 확대
- 마포소각장 추진과 동시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선정에 있어 ‘21년부터 ‘24년까지 3차례나 공모하였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유찰

4 향후계획

- 과거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1차,2차,3차 공모 시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기존 기초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조건 등을 대폭 완화
-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 소각장 및 청소차 진입로 지하화해 악취 및 매연 피해 최소화 등 엄격한 관리와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

자료제공 : 2025. 5. 13.(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공동배포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6쪽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02-2133-3670

자원순환정책팀장

이경옥

02-2133-3672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4차), 5월 13일~10월 10일 150일간 진행
- 면적 기준을 90만^m에서 50만^m으로 대폭 줄이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조건 (615만^m 이상)으로도 응모 가능하도록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크게 확대

□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화)부터 10월 10일(금)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에서 50만㎡(1)으로 대폭 줄였다.
-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2)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 시·도별 자원순환시행계획('23~'27)에 따른 폐기물 발생 추정량 및 감량 목표,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소각재 처리현황 등
 - (1) 면적기준 세부조건 : 매립시설(40만㎡, 기반시설 포함) + 부대시설(10만㎡)
 - (2) 용량기준 세부조건 :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별도)
-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 *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반입 수료료의 20% 이내 →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관련 부서 연락처 >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7400)
		담당자	서기관	김종민	(044-201-7407)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책임자	과 장	정미선	(02-2133-3670)
		담당자	사무관	이경옥	(02-2133-3672)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상훈	(032-440-5661)
		담당자	사무관	신규설	(032-440-8271)
	경기도 자원순환과	책임자	과 장	이용균	(031-8008-3520)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31-8008-42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SG전략실	책임자	실 장	이원근	(032-560-9358)
		담당자	선임차장	서용석	(032-560-9394)

朝鮮日報

서울시 마포 소각장 1심 "건립 취소해야"

마포구민 승소... 서울시 "항소"

김영우 기자

입력 2025.01.11. 01:12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새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루에 쓰레기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건립 부지를 찾기 위해 2019년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서를 낸 자치구가 없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2022년 발표 당시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했다. 1000억원을 들여 주민 문화 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1심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줌으로써 2030년까지 새 소각장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제공 : 2025. 1. 10.(금)

이 보도참고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2133-99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쪽

건립팀장

송천호

2133-9942

서울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 1심 '항소'...향후 대책 마련 노력

□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23년 8월)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 시는 15일(수)경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V

환경부 입장

1 배경

-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상태가 임박하고 추가 매립부지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1.7.6, 개정) 中 〉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2 문제점

-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소각장 신·증설 독려 문서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소각장 설치에 무산 또는 장기화 지속

〈 공공 소각장 신·증설 추진 현황 〉

NO	소각장명	시설 용량 (톤/일)	신·증설 계획 (톤/일)	신·증설 목표기간	비고
1	천안소각장	190	260	‘28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2	김해장유소각장	150	300	‘25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3	대구성서소각장	480	840	‘26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4	송도소각장	500	800	‘25년	-
5	청라소각장	420	750	‘25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6	양산소각장	200	350	‘31년	기존 시설용량 유지 (시설 리모델링)
7	경산소각장	100	170	‘25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8	마포소각장	750	1,000	‘26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9	의정부소각장	200	220	‘27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10	부천소각장	300	500	‘30년	입지선정 진행 중 (입지 선정 시 민원발생 우려)

* 출처 : 언론보도자료

- 매립부지 확보를 위해 1차(2021년),2차(2021년),3차(2024년)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자체가 전무

한국일보

3회 무산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인천시 "이달 중 추진"

3 입장

-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25.4월)
-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경우 반입총량제 강화, 부담금 강화(총량제봉투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시 톤당 1만5천원의 부담금을 내는데 유예기간 동안 금액을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 등 패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하여 소각장 증설을 독려할 계획
-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소각장을 새로 지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제시

[단독] 수도권 '쓰레기 대란' 한숨 돌린다... 상반기 중 직매립 금지 유예

유예 기간 해법 못 찾은 지자체엔 페널티

박상현 기자

업데이트 2025.03.27. 09:09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이었던 작년 6월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내년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올 상반기 내 유예 절차를 밟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주민 반대로 소각장 증설에 난항을 겪던 서울시 등 지자체는 유예 결정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한시적 유예’인 만큼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소각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 해당 제도의 유예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란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못하고, 선별·소각한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2026년 수도권, 2030년엔 전국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기피 시설인 매립지를 새로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 쓰레기 부피를 줄여 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쓰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쓰레기를 바로 처리해왔던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이 물량을 먼저 태울 소각장이 필요해졌다. 서울의 경우 하루 1156t을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해 마포에 일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소송 패소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소각 용량은 인천 일 295t, 경기 일 1017t 등 총 2468t이다.



이 많은 쓰레기, 언제까지 묻을 수 있을까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곳곳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직매립할 때 드는 부담을 높여 소각장 증설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누진세율’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나온 종량제 봉투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때 t당 1만5000원의 부담금을 내는데, 유예 기간 동안 금액을 점차 높여 소각장을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이지 공공 소각장을 신설하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든 처리 방식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경우 기존 송도 소각장을 증축하고, 나머지 물량은 인천 내 민간 소각장과 위탁 처리 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송파구의 경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공고를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 기간을 각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기호일보

홈 > 정치 > 자치/행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국 유예로 쏠리나?

환경부 내년 시행 어렵다고 판단... 국회에 2년 더 미루는 안건 보고
각 지자체 소각시설 확보 못한 탓... 4자협 관계자 "시간 충분해져"

유정희 기자 | 입력 2025.05.14 20:10 | 2025.05.15일자 1면 | 댓글 0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환경부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이 유예되면 소각장 확보에 난항을 겪던 인천시도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각 지자체가 소각장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국회에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 4년 만에 직매립 금지를 6개월여 남겨 두고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지 유예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소각장의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8천667t이지만 현재 시설 노후화와 발열 조건을 감안하면 처리용량은 더 줄어든다.

실제 2023년 기준 공공소각장의 하루 처리량은 6천458t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배출된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1만257t이었다. 재활용된 쓰레기는 1천817t에 불과해 나머지 8천440t은 모두 소각 처리해야 했지만 용량 부족으로 매립이 병행됐다.

특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을 늘려야 하지만 인천과 경기, 서울은 소각장 신·증설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는 소각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인천도 소각장 신·증설을 놓고 지자체 간 논란이 이어졌다.

시는 민선7기부터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정복 시장이 들어선 뒤 기초단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광역소각장으로 미추홀·연수·남동구가 사용할 송도소각장 현대화사업만 확정됐을 뿐이다.

특히 부평·계양구는 인근 부천시 광역소각장을 활용하려다 부천시가 지방선거 이후 방침을 바꾸며 독자적인 소각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초단체 역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설 및 확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2026년 직매립 시행은 물 건너갔으며, 결국에는 정부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현저히 감소한 점도 유예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1년 290만7천784t이었으나 2022년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시행 이후 지난해 107만1천548t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입량이 해마다 크게 줄어 매립 여지가 있는 만큼 환경부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가 유예되면 대체매립지 확보와 소각장 건설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4차 공모의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민간 참여가 허용된 만큼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V

마포구 주민 입장

1 배경

- 마포 신규 소각장의 예정 부지는 서울시가 기존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과 인접한 부지이며, 또한 인근 300m 내에 주택가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생활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추진

2 문제점

- 20년간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 75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인해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바로 옆에 일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추가 건설될 경우 그 고통이 가중



- 또한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어 2023년 마포구 주민 등 1,850명이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25.1월 1심에서 승소)

3 입장

- 신규 소각장을 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기존 소각장 성능을 개선하기만 해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폐기물 수용이 가능(현재 마포소각장의 소각 성능은 78%에 불과) / 마포 신규 소각장 설치 결사 반대

마포구 소각장 선정 형평성 위배 즉각 철회하라!

상암동 입주자 대표 연합회

마포구 추가 소각장 전면 백지화 100만 서명 운동

서울시는 마포구에 추가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당초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로 기존 시설이 있는 자치구를 제외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지난 8월 31일 기습적으로 마포구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 마포구는 지난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을 발표함에 주민들은 강력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2.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평가, 타당성 조사, 주민 영향 건강 조사 등의 과정과 절차는 무시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진행했으니 관련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3. 위 관련 내용은 물론 어떠한 사전 절차와 주민 설명 또한 없었고, 대규모 주거 지역이 1km이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만큼 인근 주민들은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생존권과 직결한 문제에 결사 반대한다.
4. 서울시가 10년 넘게 기존의 악화된 마포구의 개발 계획을 무시한 채 졸속 진행하는 자원회수시설 선정 발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5. 더 이상 마포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각 자치구의 공정한 책임 분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원안대로 제외하길 요구한다.

마포 소각장 추가 전면 백지화 투쟁 성명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은 지난 17년 동안 참아왔다. 우리는 그동안의 피눈물 나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대형 소각장 1개를 더 지으려는 서울시의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에 분노하며, 소각장 신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1. 서울시는 졸속으로 선정된 발표를 즉시 철회하라!

기존 소각장 시설이 있는 4개구는 이번에 제외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마포를 최적의 입지인 양 발표했다. 선정 배점표와 회의록을 몇몇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주민들을 우롱하는 추가 소각장 계획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마포구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기존 750톤의 소각장을 현대화로 증설한다는 말로 꾸며 신규 1,000톤을 추가하겠다는 계약으로 눈가림하고 있다. 2035년 이후 현 소각장 폐쇄 약속을 지킬지도 알 수 없다. 최소 9년 이상 1,750톤이라는 엄청난 쓰레기를 태우게 된다. 이에 우리는 절대 수긍할 수 없고, 추가 소각장 건설에 결사반대한다.

1.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재의 소각장을 당장 폐쇄하라!

발표 이후 주민들의 감시활동 결과, 90 % 이상의 차량이 부적합으로 정지 먹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소각장 시설의 개선도 거부하며, 영구 폐쇄하길 요구한다.

1. 마포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오세훈 시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서울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운운하며, 논리 없는 이중잣대로 마포구민을 짓밟고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조차도 없이 급히 발표한 서울시의 비(非)성숙하고 강압적인 행정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죄를 요구한다.

- 마포는 지난 17년을 참아왔다.
- 더 이상은 마포구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마포 소각장 추가 선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마 포 소 각 장 신 설 백 지 화
투 쟁 본 부 위 원 장 변 행 철

전국 / 서울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주민 의견서 2만건 제출

박동해 기자

2022.10.21 오후 12:02

서울시 방문해 접수... "팩스·우편 접수 합치면 5만건"
"기존 시설 있는데 추가 신설은 부당... 전면철회해야"



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공람 의견서 제출에 앞서 소각장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들의 의견서 2만여건이 서울시에 접수됐다.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투쟁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소각장 추가 신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소각장 추가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들로 결성된 조직이다.

성명서에서 투쟁본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강요 행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도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믿을 근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을 겸해서 진행됐다. 이날 투쟁본부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서 1만8043부를 시에 전달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직접 전달한 의견서 외에 팩스와 우편 등을 통해 전달한 건을 더하면 총 5만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소화할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1년8개월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현 마포구 소각장 옆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일일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신설되고 기존시설은 2035년에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 주민들은 시가 기존에 소각장이 존재한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설치 부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투쟁본부를 조직하는 등의 항의행동을 해왔다.

현재 투쟁본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족수 미달 △입지선정위에 주민 대표 미포함 △기피시설 중복설치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소각장 추가 신설 결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민의견서를 전달받은 서울시 측은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잘 정리해 입지선정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potgus@news1.kr

VI

시멘트업계 입장

1 시멘트업계 연간 폐기물 처리량

-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18년 123만톤에서 '24년 236만톤으로 약 113% 대폭 상승하고 불연성폐기물까지 합할 경우 '24년 기준 약 860만톤에 육박

(단위 : 천톤)

용도	종 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상치)
대체 원료	석탄재	3,094	3,081	2,436	2,706	2,220	2,694	2,775
	오니류	2,155	2,612	2,598	2,856	2,567	2,275	2,343
	기타 (광미 등)	412	481	542	709	529	257	265
	폐주물사	565	602	563	730	722	597	615
	소 계	6,226	6,776	6,139	7,001	6,038	5,823	5,997
보조 연료	폐합성수지	910	1,016	1,347	1,950	2,291	2,340	2,387
	페타이어	214	247	171	164	128	136	139
	폐고무류	63	68	69	111	102	104	106
	폐목재 등	51	35	20	15	1	3	3
	소 계	1,238	1,366	1,607	2,240	2,522	2,583	2,635
합 계		7,464	8,142	7,746	9,241	8,560	8,406	8,632

2 시멘트업계의 주장

- 내년부터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320만톤의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시장에 추가 공급될 것이며, 불연성폐기물인 종량제봉투를 포함하면 380만톤으로 예상
-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소각은 금지되어야 하고, 혼합 폐기물 선별을 통해 재활용, 열분해 및 에너지 회수로 확대 필요
- 시멘트 업계는 수십 년 동안 우수한 시멘트 품질을 유지해 온 경험을 토대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연료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자원순환 분야의 중요 플레이어로서 책임 수행

3 문제점

- 전국 각지의 폐기물이 시멘트 업계로 밀집되면서 국민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24.7.10)

*6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와 경실련, 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환경기술사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소각’ 행위로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커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



□ 특히, 질소산화물(NO_x) 배출기준은 270ppm으로 소각장(50ppm)에 비해 현저히 느슨함. 정부는 2029년 110ppm까지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시멘트업계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대체물질인 탄화수소 기준도 자가측정으로 실시(해외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 국내 폐기물처리시설별 대기배출허용기준 〉

No	항 목	시멘트 소성로	소각시설	제지공장	고형연료 사용시설
1	일산화탄소	-	40~50ppm	50ppm	50ppm
2	탄화수소	60ppm (자가측정)	-	-	-
3	질소산화물	270ppm	29.75~50ppm	50ppm	50ppm
4	먼지	15mg/Sm ³	8~10mg/Sm ³	10mg/Sm ³	10mg/Sm ³
5	염화수소	9ppm	8~12ppm	12ppm	10ppm
6	암모니아	20ppm	0.7~20ppm	20ppm	15ppm

〈 국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현황 〉

NO	오염물질	유럽		한국 (표준산소농도 13%)	중국 (표준산소농도 11%)
		표준산소농도 10%	13% 적용 시		
1	먼지	30mg/m ³	22mg/m ³	15mg/m ³	30mg/m ³
2	염화수소	6ppm	4ppm	9ppm	-
3	질소산화물	243ppm	177ppm	270ppm	46.3ppm(중국 평균)
4	탄화수소	18.6ppm	13.5ppm	60ppm	-
5	불화수소	1ppm	0.8ppm	2ppm	5.6ppm
6	황산화물	17.5ppm	13ppm	15ppm	70ppm
7	수은	0.05mg/m ³	0.04mg/m ³	0.05mg/m ³	0.05mg/m ³

〈 국가별 시멘트 제품 중금속 기준 〉

(단위 : mg/kg)

국가	한국	일본	EU	스위스	미국
6가크롬	20	20	2	-	5
카드뮴	-	-	-	1.5	-
수은	-	-	-	0.5	-
탈륨	-	-	-	2.0	-

□ 시멘트 소성로 반입폐기물 종류 한국은 88종(대체원료 63종 / 보조연료 25종), 유럽은 17종 ~ 25종으로 약 4배 차이

구분	대체원료 폐기물	보조연료 폐기물
독일 (25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탈황석고, 기타석고, 석탄잔재물, 정수오니, 하수오니, 소각회, 제지회,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유혈암, 기포콘크리트입자, 제지회, 석회 오니, 오일합유토양 (16종)	목재스크랩, 폐오일, 타이어, 플라스틱,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고가·백·동물사체, 종이·펄프 포장지, 지자체폐기물 (9종)
미국 (34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석회질 함유 모래, 불소폐기물, 아연폐기물, 탈황슬러지, 적니, 부스러기, 석회석, 바닥재, 유혈암잔재물, 철광석, 연못재, 비료, 슬러지 (16종)	목재칩, 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잔재물, 절삭기계유, 종이·펄프, 지자체폐기물, 솔벤트, 페인트슬러지, 타르·아스팔트, 돌밥, 고무잔재물, 피혁폐기물, 영농잔재물, 화학산업폐솔벤트, 청소솔벤트, 폐촉매, 청소찌꺼기 (18종)
일본 (20종)	연소재, 고로슬래그, 주물사, 폐백토, 오니, 비철광재, 부산석고, 폐목재, 석탄재, 제강슬래그, 분진, 폐타이어, 육골분 (13종)	폐목재,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유, 육골분, 폐백토 (7종)
프랑스 (17종)	비산재, 철질폐기물, 폐주물사, 오염토양, 불소폐기물, 폐알루미늄 (6종)	폐침목,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오일, 동물사체, 제지 폐기물·펄프, 하수슬러지, 폐페인트, 코크스, 필터 (11종)
스위스 (13종)	비산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압착용지, 목재 (5종)	숯, 폐유, 폐유기용제, 백·동물사체, 폐토양, 하수슬러지, 분진, 현상액, 담배 (8종)
한국 (88종)	분진, 철질슬래그, 제강슬래그, 재생주물사, 폐주물사, 탈황석고·폐석고, 석고류, 석탄재, 정수 오니, 하수처리오니, 연소재, 그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그밖의 연소잔재물 이상 13종은 독일과 동일 폐사·폐토사·마사토·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자동차 폐타이어, 분뇨처리오니, 공정 오니,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온공장오니, 유리식각공장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그밖의 폐기물, 폐석회, 폐콘크리트, 석재폐수처리오니, 골재폐수처리오니, 가축 분뇨처리오니, 슬러지, 철광석, 하수준설토·점토 등 이상 50종은 한국만 사용	폐목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합성 섬유, 재생연료 이상 6종은 독일과 동일 폐지, 분진, 그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밖의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제재부산물(돌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 파쇄압착물,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등 19종은 한국만 사용

□ 과거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 처리 구원 투수를 자처하며 의성 쓰레기 산에 묻혀 있던 수백 종의 폐기물이 아무런 검증 없이 시멘트 원료로 대부분 사용하고 전국적인 폐기물 수집 체계 구축하면서 제조업 기능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업으로 전환



4 폐기물 시멘트 피해 실태

가. 대기에 끼친 피해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은 전체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임과 동시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은 업종 중 가장 많이 배출

(단위 : 톤/년)

구분	계	먼지	SOx	NOx	HCl	HF	NH ₃	CO
발전업	77,936	2,012	27,848	47,512	179	-	-	385
시멘트제조업	50,295	790	-	49,442	63	-	-	-
제철·제강업	44,491	1,075	18,130	25,282	5	-	-	1
석유·화학제품업	18,911	382	4,122	14,161	10	2	3	233
기타	13,458	319	1,607	9,538	328	-	-	1,666

○ 2020~2022년의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오염물질 대량 배출 사업장 중 시멘트 공장 4곳이 10위권 내에 포함

(단위 : 톤)

순 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장명	배출량(톤)	사업장명	배출량(톤)	사업장명	배출량(톤)	사업장명	배출량(톤)	사업장명	배출량(톤)
1	현대제철(주) 당진	23,292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9,420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9,095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6,121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20,824
2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19,932	현대제철(주) 당진	17,832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15,436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10,306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14,278
3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9,668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17,540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9,460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8,340	현대제철(주) 당진	10,412
4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17,341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14,284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7,730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8,087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9,317
5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14,993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12,419	현대제철(주) 당진	7,720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7,621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8,437
6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	14,935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10,792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7,512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	7,295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7,815
7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13,889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10,478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7,135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6,769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7,433
8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13,428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	9,868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6,876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6,690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	7,136
9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11,346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9,240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6,661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6,523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6,454
10	지에스칼텍스(주) 여수	10,581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9,136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6,394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6,506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6,156

- 이를 반증하듯 시멘트 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있는 강원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순위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밀집되어있는 충남 다음으로 2위를 차지

(단위 : 톤)

구 분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 ₃	CO
총 남	36,693	1,245	17,752	17,446	98	-	0.5	149
강 원	36,285	751	2,630	32,854	16	-	-	31
전 남	33,599	687	10,851	21,929	12	1	0.05	116
충 북	20,367	225	89	19,793	95	-	-	163
경 북	18,581	351	4,570	13,563	27	0	0.2	68

나. 인체에 끼친 피해

- 시멘트에 다량 함유되어있는 6가크롬(자율기준으로 관리)으로 인해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유발

각종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 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6가 크롬 이외에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항목이 폐기물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일 뿐 이런 물질들이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유해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들이 일부 제기돼 왔으나 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폐기물의 사용량은 증가됐다.

※출처 : 폐기물 녹여만든 '쓰레기 시멘트'...전국 아파트 도배해(그린포스트코리아, '20.2.12)

추태호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나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유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라고 생각한다"며 "등급제를 통해 국민이 무해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폐기물시멘트, 6가크롬 등 발암물질 검출...사용처 달리해야"(공감신문, '22.1.26)

- 또한, 시멘트 공장 밀집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계 질환은 시멘트 공장 분진 및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심지역에 비해 호흡기 증상의 심각성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

□ 주민건강조사 결과, 40세 이상 주민에 대한 폐기능검사에서 **환기기능장애 유소견자 228명(유효조사자 1,550명 중)**과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직업력이 없는 **진폐환자 3명이 확인**됐다.

※ 환기기능장애 : 기관지나 폐의 염증 등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폐기능 감소 등이 초래되는 증상

- 환기기능장애의 연령표준화 유병률은 강릉시 9.3%(115명), 동해시 10.6%(113명)로 대조지역인 동해시 망상동의 4.1%보다 높았다.

※출처 : 강릉·동해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결과(환경부, '13.4.12)

〈시사점〉

폐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분진에 노출된 지역의 대상자들은 만성 염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고, 벽이 두꺼워지며, 다른 분지각(bifurcation), 조직의 탄력성이 소실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은 시멘트 분진의 입자 크기 분포와 우선적 침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호흡기질환 및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성과보고서(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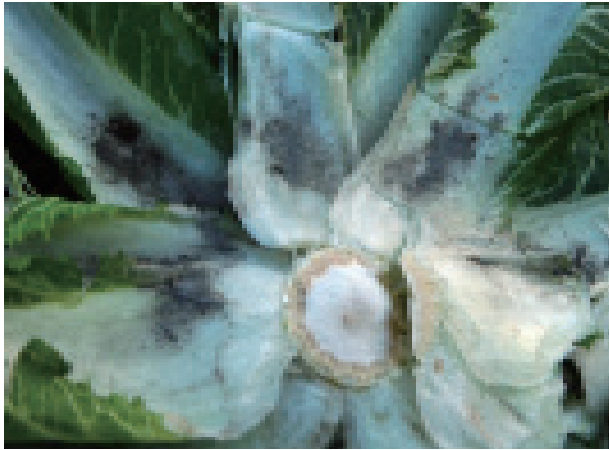
다. 지역에 끼친 피해

-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인해 주변 농작물에서는 납, 크롬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

(단위 : mg/kg)

구분		납	카드뮴	비소	수은 (μg/kg)	크롬	구리
사과	중금속 기준	0	0	0	0.07	0.01	0.62
	분석 결과	0~0.7	0	0	0	0.3	5.1~5.9
배추	중금속 기준	0.028	0	0	0.13	0.18	0.32
	분석 결과	0	0	0	0	0.4	7.2

*출처 : 시멘트 산업에서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한양대학교, '08.8)

	
시멘트 공장 주변 배추	시멘트 공장 주변 과수원 사과

-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악취 발생 및 전국에서 집결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으로 연일 지역 민원 발생

라. 주거공간에 끼친 피해

- 시멘트 공장에서 본격적인 폐기물 사용이 시작된 '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률이 13배 이상 증가

◆ 쓰레기 시멘트 아파트 = **쓰레기 시멘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186만6000가구로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26.7%에 달한다. 이 기간중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아토피성 피부염 유병률은 2001년 5.07명에서 2005년 70.0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피부염 환자 수도 1995년 453만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년 96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출처 : 아파트에 본격사용 뒤 피부염환자 급증, 문화일보('07.10.11)

- 특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경우 아토피·각종 암을 유발하는 6가 크롬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건축된 구조물의 파손·노후로 인해 비산되는 시멘트 가루 흡입 시 인체 중대 피해 우려
- 또한,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함량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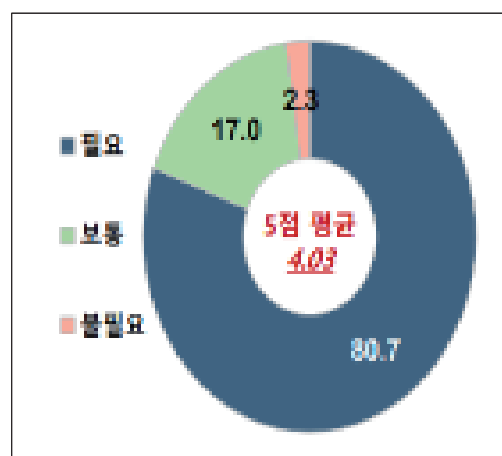
(단위: ppm)

구 분	6가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납
폐기물 사용 시멘트	9.44	10.12	-	124.86	0.08	69.89
폐기물 미사용 시멘트	4.75	3.85	-	12.10	-	65.19

*출처 : 시멘트 제품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국립환경과학원, '20.1~12)

마. 국민 정서에 끼친 피해

-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 80% 이상의 국민들이 각종 폐기물 사용된 시멘트에 대해 등급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출처 : 건설안전 관련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한국여성소비자연합, '21.9.28)

5 외국의 폐기물 시멘트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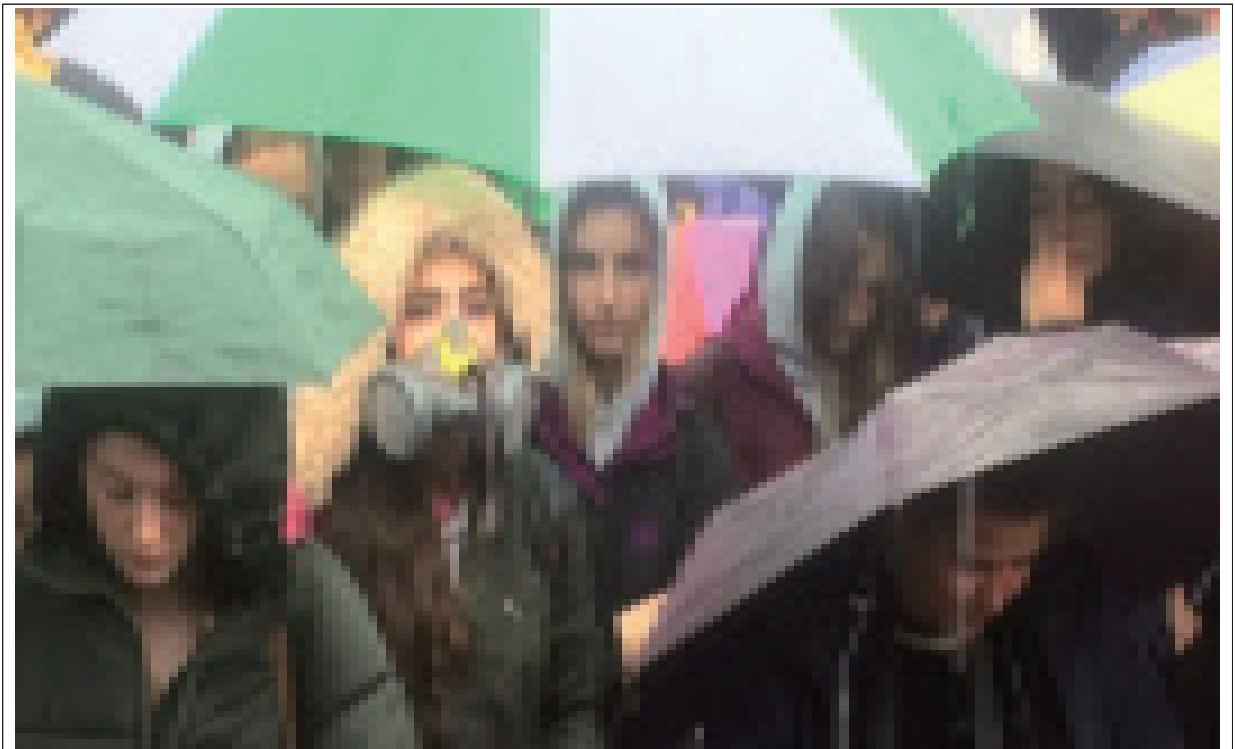
- 시멘트 2010년 설립된 '스페인 시멘트 공장 폐기물 소각 반대 단체'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다이옥신 및 카드뮴 등의 오염 물질이 소아암, 호흡기 질환과의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제기('14.3.13)



- ‘유럽 시멘트 공장 폐기물 소각 반대 모임’에서도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소각은 환경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14.11.14)



-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사용 허가가 승인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정치인, 유명인사 등 2,000여명이 반대 시위 진행(‘19.10.5)





〈 시멘트 공장에서 직매립 금지 폐기물 처리 시 판도 〉



"쓰레기 시멘트, 국민 건강 위협...주택법 개정으로 알 권리 보장하라"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5.05.08 10:08 | 댓글 0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정보공개 확대·주택법 개정 절실성 호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 국민 75%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 집이 어떤 시멘트로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릉·동해·제천·영월 등 이른바 '시멘트 벨트'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쓰레기 시멘트'의 실태를 고발하며, 시멘트 성분 정보를 건축물에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시멘트는 더 이상 건설의 쌀이 아니라 쓰레기의 종착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멘트 성분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제조되는 시멘트에는 중금속과 염화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아토피, 새집증후군,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철근을 부식시켜 건축물 붕괴 위험까지 키운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한 환경운동가는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염소 성분은 철근을 녹슬게 해 건물 수명을 단축시킨다. 최근 아파트 붕괴 사고도 결코 남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 쓰레기가 집이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 제품의 성분과 유해물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포장지 성분 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안은 시공 이후 건축물 내에서의 정보 투명성을 요구하는 후속 입법이다.

참가자들은 이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이자, 환경 건강권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인가, 시멘트 대변인인가

이날 현장에서는 시멘트 업계를 대변하는 듯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 시도에 대한 비판도 거뒀다.

특정 의원이 시멘트 연료의 쓰레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 없이 비공개 토론회를 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국회의원이냐, 시멘트 공장 대리인이냐”며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숨 쉴 권리를 되찾자”

‘남한강의 친구들’ 이상학 회장은 “강원 제천의 새벽 공기는 굴뚝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가득하다. 아이들이 그 공기를 마시고 자란다”며 환경 오염과 지역 인구 감소의 연결고리를 지적했다.

‘범국민 시멘트대책위원회’ 박남화 위원장은 “오늘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전날 밤 기차를 타거나 새벽 첫차로 올라왔다. 지하철도 어렵지만, 환경을 위한 절박함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박남화 위원장은 이어 “이 작은 텐트가 우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주택법 개정 통과와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반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멘트 벨트 지역 주민들의 외침은 단지 지역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환경 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

[기고] 시멘트업계, 피해 주민들 인내력 시험하지 말라

⚡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의장 |
🕒 승인 2025.02.11 18:23

**"시멘트 NOx 기준 강화 방침 반드시 지켜야"
업계, 지난 15년 '특혜'도 모자라 또 완화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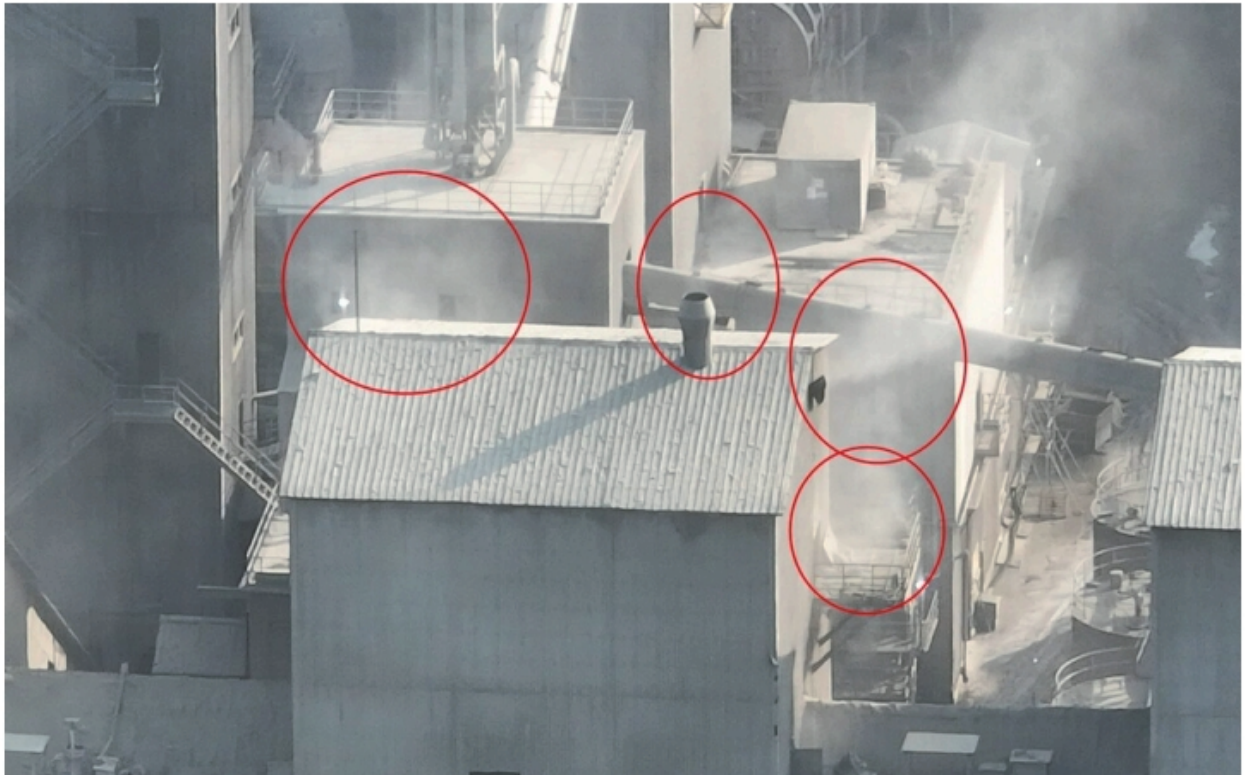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진.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제공]

필자가 살고 있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은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해 핵심 피해지역 중 한 곳이다. 반경 7km 이내에 3개의 공장이, 반경 15km 이내에 6개의 거대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쓰레기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분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NOx(산화질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의 비공(飛空) 거리가 200km가량이라고 하니 까 7~15km 거리 정도는 인체로 비유하면 콧구멍 바로 아래쯤에서 유해 가스가 피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고장이 시멘트공장 우심 지역이 된 지난 60여 년 동안 주민들이 받은 환경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최근의 사례만 살펴보자. 환경부가 9년만에 지역 주민들의 시멘트 공해 피해 실태를 살펴보겠다고며 송학면 아세아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여름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이에 응했다. 최근 1차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27명이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자의 4분의 1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쓰레기 사용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10여 년 사이 우리 마을 부근에 암환자뿐 아니라 폐쇄성폐질환, 진폐증 등 호흡기, 순환기계 만성 질환자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전에 없던 냄새 공해나 농산물 피해 실태도 급증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내의 쓰레기시멘트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한국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NOx의 경우 충북도 내 발생 총량의 90% 이상이 제천-단양지역에 집중돼 있다. 제천-단양뿐 아니라 시멘트공장 분포지역인 '시멘트 벨트'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 지역의 50만 인구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무리 강원도-충청도 산골에 사는 벽지의 주민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는 있는 것 아닌가.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진.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제공]

정부는 무슨 이유로 그동안 가장 유독한 NOx 기준을 국내 유사한 대기환경오염 산업군인 제철-제련(170ppm), 화력발전(70ppm), 폐기물소각장(50ppm)보다 몇 배나 완화된 270ppm이라는 기준을 시멘트공장에 '특혜' 적용해 왔는가? 무슨 이유로 지난 15년간 시멘트공장만 대기오염물질 규제 예외 사업장으로 인정해 준 것인가? 외국의 시멘트공장 NOx 기준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시멘트공장들은 그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어 왔다. 유럽 시멘트 공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표준산소농도 13%를 적용할 경우 177ppm이고, 환경 후진국이라고 하는 중국마저 46.3ppm이다.

유예기간 15년은 모두 지나갔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시멘트공장의 NOx 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목표 연도인 2029년에 110ppm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가 건설경기 침체, 시멘트업계 경영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최종 연도인 2029년 기준 120ppm으로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국민과 정부를 속이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시멘트 업체의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3분기 시멘트회사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회사별로 한일시멘트 2358억원(전년 대비 29.7% 상승), 쌍용C&E 1066억원(36% 상승), 아세아시멘트 1179억원(10.6% 상승), 삼표시멘트 831억원(29% 상승), 성신양회 580억원(48.5%) 등의 영업이익을 냈다.

우리나라 시멘트공장들이 시멘트 판매 수익보다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현대사회의 골칫덩어리이자 필요악인 쓰레기를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 시멘트공장들이 이 일의 일부를 맡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와 시멘트 제품 속에 포함된 쓰레기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책 의지다. 화력발전, 제철-제련, 폐기물소각장 등 국내 다른 산업군이나 외국의 시멘트공장들은 'SCR' 같은 비교적 깨끗한 쓰레기 처리 기술과 시설을 설치해 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왜 유독 우리나라 시멘트공장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터무니없이 느슨한 기준 속에서 특혜를 누려온 것인가. 이제 그 1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가자 또다시 거짓 자료와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과 정부, 국회를 속이려 하고 있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의장

이제는 더 이상 속거나 참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시멘트 벨트 지역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대기환경뿐 아니라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현세대가 감내할 고통은 차치하고, 정녕 미래 세대에게도 죄를 지을 심산인가. 시멘트 회사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멘트 벨트 지역 주민의 인내력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대책회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완화 반대 성명 발표

☞ 권영인 (list.php?searchWriter=권영인) 기자 | ☎ 발행 2024-12-12 13:37

환경부, 배출기준 2029년까지 110ppm으로 강화 계획에서 120ppm으로 완화 검토



시멘트공장 전경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멘트 공장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하는 시설로, 이러한 규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시멘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현행 135ppm에서 2029년까지 110ppm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120ppm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은 시멘트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한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이미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는 이러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TOP

한편,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가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하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은 불가피하며, 고효율 저감시설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규제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의 규제 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의 :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의장 박남화 010-4713-7289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 ([list.php?searchWriter=권영인](#))

“시멘트 포대에 원료 및 구성성분 표기해야”

✎ 채덕종 기자 | ☎ 승인 2024.09.30 06:00

국민건강 위해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정보공개가 필수
‘폐기물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투뉴스]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원료, 구성성분 등을 국민이 된장이나 고추장 살때처럼 알기 쉽도록 포대에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유해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8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확정된 데 따라 하위법령에 합리적인 규정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시멘트 공장은 13~34종 정도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국내는 88종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산품의 경우 포장재에 원료와 구성성분을 표기한다. 시멘트 역시 포대에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벌크 유통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시멘트업체가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 매우 까다로워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관식 박홍배 국회의원 보좌관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으로 시멘트도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인정이 EU 등과 비교해 현실에 맞지 않고, 물질재활용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과도 충돌하는 만큼 소성로 재활용에 대한 지위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시멘트의 경우 폐기물을 태운 소각재가 들어가는 만큼 소각재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순환경제 차원에서 시멘트 재활용은 인정하되 유해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시멘트업체 홈페이지를 보니 폐기물 정보나 시멘트 중금속 성분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60년 동안 시멘트만 성분표시가 안 된 것은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며 시멘트 등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은 “시멘트업계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면 폐기물 정보공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누가 관리·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폐기물 반입 전 선별을 통해 반입가능·불가 폐기물을 나눠야 하고, 지역주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이 중요하고, 현실적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포대 및 벌크 제품에 대한 표시 문제는 24시간 돌아가는 시멘트제조공정 상 폐기물 투입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발암물질 없는 시멘트는 단 하나? 충격적 자료 공개합니다 [최병성 리포트]

최병성 · 2022. 6. 17. 05:54

🔊 📄 ✎ 📁

Ⅰ [최병성리포트] 주거시설 위협하는 독성 시멘트.. 등급제로 국민 건강 지켜야

[최병성 기자]



▲ 산봉우리가 사라지고 급경사면에 특이한 문양이 만들어졌다.
© 최병성

외계인이 다녀간 것일까? 높은 산봉우리에 독특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곳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시멘트용 석회석을 캐내는 광산이다. 산봉우리가 사라졌다. 급경사면에 돌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오르내리는 길을 낸 덕에 다른 광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 되었다.



▲ 산업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줄줄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최병성

산업쓰레기를 가득 실은 녹색 차량들이 줄지어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입구에 '성신양회'라고 쓰여 있다. 성신양회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다. 국내 최대 시멘트공장 중 하나다. 시멘트는 석회석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 시멘트공장 안에 있는 쓰레기 저장 창고다. 쓰레기를 실어 온 대형 트럭들이 쓰레기 하역을 위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또 다른 시멘트공장. 공장 안 창고 입구에 쓰레기를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차례대로 창고 안에 쓰레기를 하역하고 나온다.

쓰레기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들어간 창고 안엔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이 곳곳에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대형 창고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 최병성

발암물질 없는 유일한 시멘트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멘트공장들은 석회석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그 결과 시멘트 안에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발암물질 없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거의 없는 시멘트 제품이 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명단에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국C&T, 유니온시멘트가 올라 있다.

이중 발암물질이 없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유니온시멘트다. 놀라운 것은 발암물질인 6가크롬만 없는 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거의 없거나 다른 시멘트회사보다 적다는 점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시멘트를 분석해보았다. 쓰레기 차량이 줄줄이 들어가던 성신양회 시멘트와 유니온시멘트를 국내 최고수준의 공인 분석기관인 세라믹기술원에 의뢰했다.

분석 결과, 시멘트 안의 발암물질과 중금속 차이가 확실했다. 유니온시멘트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불검출'이었다. '불검출'은 '발암물질이 없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성신양회 시멘트에서는 6가크롬이 15.3ppm 나왔다.

분석 내용 중 중금속 크롬(Cr)을 비교해보면 발암물질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유니온시멘트 제품 중에 크롬은 5.71ppm에 불과하지만, 성신양회 시멘트 제품은 크롬이 무려 46.5ppm이었다.

시멘트 안에 있는 크롬은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전환된다. 일본의 경우 크롬의 6가크롬 전환율이 10~15%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두 배인 20~30%에 이른다. 때문에 크롬이 5.71ppm에 불과한 유니온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성신양회 시멘트에서는 6가크롬 전환율이 30%가 조금 넘는 15.3ppm이 검출된 것이다.

인체 유해 중금속인 구리(Cu) 역시 유니온시멘트에서는 불검출이다. 그러나 성신양회 시멘트에서는 무려 104ppm이나 검출되었다.

환경부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매달 국내 모든 시멘트 제품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등록된 국내 모든 시멘트회사의 시멘트에는 발암물질 6가크롬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유니온시멘트만 발암물질 '불검출'이다. 인체유해 중금속 역시 유니온시멘트와 다른 시멘트공장 제품들과 차이가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유니온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이 언제나 '불검출'인데 반해, 다른 시멘트회사의 제품에서는 매달 발암물질 수치가 다르다. 시멘트에 그날 어떤 쓰레기를 넣었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시멘트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 아니라 '쓰레기'의 차이

왜 유니온시멘트에만 발암물질이 없는 것일까? 유니온시멘트가 다른 시멘트공장들 보다 시멘트 생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일까?

아니다.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은 기술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멘트 제조 시에 넣는 '쓰레기 사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최근 쌍용C&E로 개명한 쌍용양회 공장 정문 앞에 '경축~ 쌍용양회 폐기물 소각 전국 1위'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쌍용양회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붙여 놓았던 현수막이다.

시멘트공장은 쓰레기 소각이 아니라 시멘트 생산을 위해 지어진 공장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온도가 높을 뿐 환경오염 저감 시설이 불완전하다. 당연히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시멘트엔 발암물질과 중금속 비율이 높아진다.

페타이어, 페플라스틱,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유 등의 가연성 쓰레기들을 비롯해 석탄재, 하수슬러지, 각종 공장의 오니, 소각재, 분진 등 비가연성 쓰레기까지 시멘트공장에 들어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다. 이제 국민들은 내가 살아가는 집이 어떤 쓰레기들로 만들어졌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가 정말 쓰레기로 만들어지는지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목록을 함께 살펴보자.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현대한일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전체 목록을 입수했다. 총 173개의 각종 공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영월의 시멘트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는 시멘트공장의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반입량에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멘트공장이 동일하다.

32평에 150만원에 불과하다

시멘트에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시멘트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도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가득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게 환경부 때문이다.



▲ 아파트 전세 19억원, 매매 36억원이다. 이 아파트에 들어간 시멘트 값은 얼마나 될까?
© 최병성

32평 아파트에 사용되는 총 시멘트 값은 약 150만 원 정도다. 아파트 값이 5억 원이라 할 경우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요즘 전국 아파트 분양비는 평당 최소 1천만 원이다. 32평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평 분양비도 되지 않는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시멘트값은 아파트 값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시멘트업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시멘트 값 또 오른다... 레미콘·건설사 반발'이란 지난 2022년 1월 4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자. 레미콘업계와 건설사가 시멘트 값을 인상하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반발하자, 시멘트협회 관계자가 '30평형 아파트 한 채당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이 157만원에 불과하여 시멘트 가격 인상이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깨끗한 시멘트 원해

쓰레기 처리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환경부가 담당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쓰레기를 해결했다고 국민을 기만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환경부의 잘못된 쓰레기 처리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환경재단,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쓰레기시멘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17~18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통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무선 100% 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산업쓰레기가 들어간 시멘트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75%였다.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67.2%의 응답자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국민은 환경부에 쓰레기시멘트를 허락한 적이 한번도 없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쓰레기시멘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유해물질 등을 표시하는 시멘트 제품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86.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와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등급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겨우 4.6%였다. 이는 시멘트 등급제를 통해 국민들이 시멘트를 선택할 권리를 원하고 있음을 말한다.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에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하면서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지금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은 쓰레기 치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편의주의와 시멘트공장의 돈벌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CX Trends 2025

2025 CX 트렌드 보고서

시를 활용한 미래 CX 정책,
지금 CX 트렌드 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



탁월한 CX 솔루션을 구현하는 방법

혁신적인 CX 트렌드센터가 되는 방법, 지금 확인하기

 Zentao

AD

환경부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금처럼 시멘트공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VII

민간 소각업체 입장

1 민간소각장 폐기물처리 여유용량 진단

□ '24년 기준 민간 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3,970톤으로 일 2,894톤의 여유용량을 보유

No	구분	업체명	소재지	허가용량 (톤/일)	'24년 처리량 (톤/년)	여유용량 (톤/년)	여유용량 (톤/일)
1	수도권	A	경기 안산시	139.2	34,514	33,164 ('24.12월 증설)	92
2		B	경기 안산시	119.4	45,543	12,509	20
3		C	경기 안산시	140.88	56,404	12,092	18
4		D	경기 안산시	290.4	104,448	36,744	76
5		E	경기 시흥시	277	110,123	24,554	60
6		F	경기 안산시	96	40,341	6,335	9
7		G	경기 평택시	176.4	71,433	14,333	30
8		H	경기 양주시	72	25,041	9,966	20
9		I	경기 화성시	96	34,022	12,653	27
10		J	경기 동두천시	91.2	37,102	7,239	9
11		K	경기 광주시	72	27,817	7,189	15
12		L	경기 화성시	93.6	33,023	12,485	22
13		M	경기 화성시	48	13,686	9,651	25
14		N	경기 오산시	70.1	24,771	9,312	18
15		O	인천 남동구	80.4	28,846	10,244	21
16		P	인천 남동구	96	39,077	7,598	14
17		Q	인천 서구	96	40,146	6,529	13
18		R	인천 서구	150	61,286	11,644	18
19		S	인천 서구	44.4	12,371	9,217	19
20		T	인천 중구	140	29,186	38,882	107

No	구분	업체명	소재지	허가용량 (톤/일)	'24년 처리량 (톤/년)	여유용량 (톤/년)	여유용량 (톤/일)
21		U	경기 시흥시	200	미제출		
22		V	경기 양주시	62.4	16,706	13,633	37
23		W	경기 포천시	24	미가동		
소 계					885,886	305,973	667
24	강원	X	강원 동해시	36	미가동		
25	충청권	Y	충북 청주시	99.8	29,148	19,375	50
26		Z	충북 청주시	352.8	121,207	50,325	120
27		AA	충북 청주시	91.2	36,117	8,224	12
28		AB	충남 천안시	192	68,329	25,022	52
29		AC	충남 당진시	93.6	33,254	12,254	26
30		AD	충남 천안시	93.6	32,726	12,782	28
31		AE	세종 전동면	78	30,591	7,332	12
32		AF	충북 청주시	-	미가동		
33		AG	충남 당진시	188.016	62,488	28,925	70
34		AH	충북 청주시	451	146,254	73,022	199
35		AI	충북 청주시	93.6	미제출		
36		AJ	충북 청주시	370	103,233	76,661	207
37		AK	충남 천안시	96	39,799	6,876	11
38		AL	충남 천안시	72	25,094	9,912	17
39		AM	충남 천안시	90	33,178	10,580	18
40		AN	충남 서산시	94.99	37,136	9,049	17
41		AO	대전 대덕구	196.3	80,093	15,348	36
소 계					878,647	365,687	875
42	남부권	AP	부산 사하구	48	17,044	6,293	19
43		AQ	부산 사하구	300	122,457	23,403	69
44		AR	울산 울주군	120	51,501	6,843	20

No	구분	업체명	소재지	허가용량 (톤/일)	'24년 처리량 (톤/년)	여유용량 (톤/년)	여유용량 (톤/일)
45		AS	울산 남구	94.8	33,196	12,895	38
46		AT	울산 울주군	94.8	28,737	17,354	51
47		AU	울산 남구	463	203,102	22,009	65
48		AV	울산 남구	91.2	29,637	14,704	43
49		AW	경남 창원시	96	37,901	8,774	26
50		AX	경남 창원시	84	26,703	14,138	42
51		AY	경북 구미시	208.8	93,823	7,696	23
52		AZ	경북 구미시	94.8	39,369	6,723	20
53		BA	경북 포항시	155.8	61,973	13,777	41
54		BB	경북 칠곡군	93.6	35,372	10,137	30
55		BC	경북 영천시	72	29,268	5,739	17
56		BD	경북 경주시	91.2	34,921	9,420	28
57		BE	울산 남구	79.2	30,949	7,558	22
58		BF	경북 의성군	6.4	미가동		
59		BG	경북 칠곡군	93.6	미제출		
60		BH	경남 양산시	60	19,836	9,336	27
61		BI	경남 양산시	48	미가동		
62		BJ	경남 양산시	48	미제출		
소 계					895,789	196,799	578
63	호남권	BK	광주 서구	72	30,725	4,282	13
64		BL	전남 장성군	76.8	30,196	7,144	21
65		BM	전남 무안군	72	23,632	11,374	33

No	구분	업체명	소재지	허가용량 (톤/일)	'24년 처리량 (톤/년)	여유용량 (톤/년)	여유용량 (톤/일)
66		BN	전남 무안군	36	14,924	2,580	8
67		BO	전남 여수시	124.8	52,167	8,511	25
68		BP	전남 여수시	98	37,046	10,602	31
69		BQ	전남 여수시	84	33,618	7,223	21
70		BR	전북 익산시	91.2	40,823	3,518	10
71		BS	전북 군산시	341	126,355	39,439	116
72		BT	전북 전주시	60	27,971	6,112	18
73		BU	전북 전주시	62.4	27,493	2,846	8
74		BV	전남 여수시	93.6	33,628	11,880	35
75		BW	전북 정읍시	96	미제출		
76		BX	전남 곡성군	28.8	미가동		
77		BY	전북 군산시	90	미제출		
소 계					478,578	115,511	340
계					3,138,900	983,970	2,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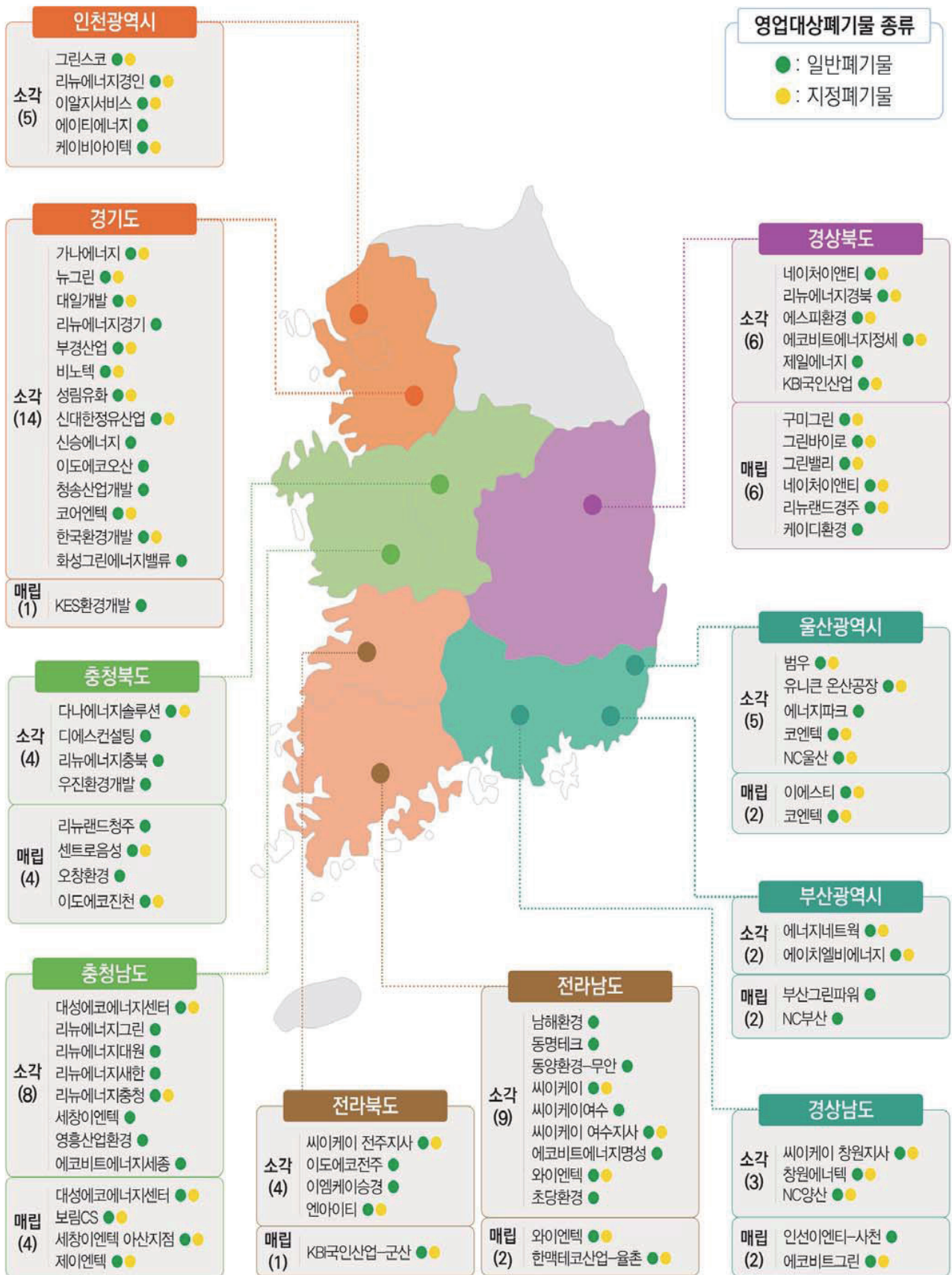
*여유용량 산정 : [①(시설용량 × 340일 × 130%) + (① × 불연물 선별 10%)] - 실제처리량

*983,970톤/년 ÷ 340일/톤 = 2,894톤/일



- 서울,경기,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직매립량은 연간 약 633천톤이며 민간 소각장 여유용량은 983천톤으로 충분한 처리가 가능
- 특히 수도권으로 일컬어지는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 671천톤으로도 처리가 가능

< 전국 민간 소각시설 분포도 >



2 민간 위탁 시 경제성 진단

□ 마포소각장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비, 유지관리비, 주민편익시설 설립기금 등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20년 동안 최소 2조 3,900억원

***톤당 처리비 : 약 350,000원 이상[20년(340일/년)간 일 1,000톤 처리 시]**

□ 그러나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간소각장 활용 시 위탁 처리비용에 모든 비용(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20년 동안 약 1조 200억원 소요 예상

□ 일 1,000톤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마포소각장 설치·운영이 아닌 민간소각장 활용 시 20년간 약 1조 3,7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

*기존 마포소각장(750톤/일) 운영을 전제로 직매립되는 마포구 생활폐기물(7,539톤/년)만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20년간 약 226억원만 소요됨

〈 생활폐기물 처리 시 민간소각장 활용에 따른 소요비용 비교표 〉

구분	일 1,000톤 처리 기준		비고
	마포소각장 신규 설치	민간소각장 활용	
시설 설치비	1조 2,800억원	기존시설 활용으로 설치비용 없음	내구연한 20년
처리비 ¹⁾	406억원/년 (8,120억원/20년)	510억원/년 (1조 200억원/20년)	처리비 150,000원/톤 적용 시
유지관리비 ²⁾		처리비에 포함	
주민지원기금	2,000억원/20년	-	
편익시설	1,000억원	-	
계	2조 3,920억원/20년	1조 200억/20년	20년간 1조 3,720억원 차액 발생

1) 1,000톤/일 × 150,000원 = 1.5억원/일 × 340일/년 = 510억원/년 × 20년 = 1조 200억원/20년

2) 202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23년)

· 806,918백만원(2022년 공공소각시설 연간유지관리비) ÷ 19,841.7톤/일(공공소각장 전체용량)
× 1,000톤/일(마포소각장 용량)

3 민간 위탁 시 안전성 진단

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 비용 인상 및 처리거부에 대한 해결방안

- 산업폐기물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낮은 생활폐기물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소각장 활용 시 처리비용 인상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물가상승률 이내로 처리비용 인상폭을 제한하고 장기 계약(ex 5년, 10년) 실시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최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 시 다년(3년) 계약 실시

- 민간소각장에서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차원의 책임 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민간소각장 쏠림 현상 발생 시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피에 대한 해결방안

- 민간 소각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2,894톤/일의 여유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기간 또한 최대 30일로 설정되어 있어 유기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처리는 기본
-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 거부 발생을 대비하여 타 민간소각장과 복수계약 및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조건부 계약도 가능

다.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 민간소각장의 경우 시설용량에 따라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 수렴 포함) 절차 진행 및 '17년도 제정·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환경 관련 법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더불어 5년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각장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적정 여부를 판단

*통합허가대상 민간소각장의 경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50~85%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전국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 위탁처리 현황 〉

NO	시도	시군구	위탁건수	위탁량
1	서울	강남구	2	12,500
2		강동구	1	8,000
3		강북구	1	6,000
4		강서구	3	6,000
5		관악구	2	15,504
6		광진구	2	3,300
7		금천구	3	13,400
8		노원구	1	7,000
9		도봉구	1	7,400
10		동대문구	3	5,060
11		동작구	2	9,300
12		마포구	1	5,400
13		서초구	1	13,200
14		성동구	2	12,480
15		성북구	2	10,600
16		양천구	1	4,780
17		영등포구	2	8,820
18		용산구	1	3,200
19		은평구	3	12,300
20		중구	2	3,180
21		중랑구	3	8,800
22	인천	서구	1	3,000
23		동구	1	1,443
24		연수구	1	130
25	경기	파주시	1	3,900
26		김포시	1	12,273
27		화성시	2	3,625
28		여주시	4	2,100
29		양평군	1	1,375
30		가평군	3	5,250
31		고양시	4	32,453
32		광주시	4	27,250
33		군포시	1	300
34		부천시	1	300
35		안산시	1	5,100

NO	시도	시군구	위탁건수	위탁량
36		안성시	2	10,552
37		안양시	3	10,660
38		오산시	1	600
39		의왕시	2	7,100
40		이천시	3	8,020
41		평택시	2	8,400
42		하남시	2	14,300
43	충북	청주시	2	9,600
44		진천군	1	1,200
45	충남	천안시	1	1,200
46		금산군	1	1,200
47		당진시	2	11,820
48		부여군	1	3,600
49		서산시	2	14,100
50		예산군	1	2,400
51		홍성군	2	14,730
52	광주	광산구	1	1,800
53		남구	1	1,500
54		북구	1	3,450
55	전북	군산시	1	1,140
56		순창군	2	1,560
57		전주시	2	3,330
58		정읍	1	13,170
59	전남	구례군	1	450
60	경북	경주시	2	5,370
61		구미시	1	1,650
62		김천시	1	960
63		성주군	2	600
64		영천시	1	16,200
65		청송군	2	3,150
66		칠곡군	1	24,600
67	경남	김해시	1	870
계			67개 시군구, 474,000톤(114건)	

*출처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환경부 제출, 민간소각장 생활폐기물 처리제안서 〉

(‘24.4.3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1 개 요

- ‘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마포소각장을 비롯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공소각장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

* 수도권매립지 외 타 지역 공공매립장은 ‘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이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해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고민을 해소하겠다는 민간 소각업체의 입장 전달

* 공공소각장 신규 설치 시 타당성조사, 입지확보, 주민갈등 해결 등에 10년 이상 소요

2 문제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연간 663천톤으로 직매립 금지 시 민간 소각업체 활용없이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 발생이 자명

* 전국에서 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1,432천톤으로 이중 수도권에서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량은 44%인 633천톤

수도권 : 633천톤

〈 전국 지자체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매립 현황 〉

(단위 : 천톤/년)

NO	시도	생활폐기물 매립량	NO	시도	생활폐기물 매립량
1	서울	269	10	강원	121
2	인천	66	11	충북	24
3	경기	298	12	충남	42
4	부산	23	13	전북	34
5	대구	148	14	전남	115
6	광주	107	15	경북	45
7	대전	40	16	경남	98
8	울산	1	17	제주	1.1
9	세종	0	계		1,432

* 출처 :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2022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마포소각장을 비롯 천안소각장, 대구소각장 등 여러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전국 지자체 공공 소각장 신·증설 현황 〉

NO	소각장명	시설 용량 (톤/일)	신·증설 계획 (톤/일)	신·증설 목표기간	비고
1	천안소각장	190	260	'28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2	김해장유소각장	150	300	'25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3	대구성서소각장	480	840	'26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4	송도소각장	500	800	'25년	-
5	청라소각장	420	750	'25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6	양산소각장	200	350	'31년	기존 시설용량 유지 (시설 리모델링)
7	경산소각장	100	170	'25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8	마포소각장	750	1,000	'26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9	의정부소각장	200	220	'27년	민원발생으로 난항
10	부천소각장	300	500	'30년	입지선정 진행 중 (입지 선정 시 민원발생 우려)

* 출처 : 언론보도자료



**신·증설 난항과 직매립 금지 압박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폐기물을 일시 또는 상시
민간 소각시설 활용으로 대체 가능**

3 민간 위탁 시 특징점

- 공공소각장 신·증설에 따른 반대 민원 및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 민간 위탁 시 공공소각장 초기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 가능
 - * 200톤/일 소각시설 1기 설치 시 약 660억원 소요(서산시자원회수시설 설치 공고서 참조)
- 선진화된 소각 기술과 장기간 축적된 운영 방식에 따라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가능**
 - * 공공소각장의 경우 반입폐기물 발열량 및 시설 노후화로 시설용량 대비 76%로 가동으로 비효율적인 운영

4 신뢰성 제고 방안

- 처리단가 상승 우려에 대한 지자체 불안감 및 부담감 해소를 위해 **장기 계약(5~10년) 실시**
- 의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거부 또는 처리단가 인상 요구 발생 대비 **복수 계약 및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조건부 계약**
-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장으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책임 보증 제도** 도입

5 기대효과

- '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한 폐기물 처리 대란 사전 예방 가능
- 무리한 공공소각장 신·증설 추진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 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된 소각열에너지를 재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

[특별기고/김형순] “위기의 산업폐기물 소각, 언제나 길은 있었다”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7-19 09:22 ▾

🔍 0 ♡ 0

🔗 📄 📧

[100년 기업을 향해]

40여 년 역사의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국가 산업의 배후 기지로 산업 활동에서 발생된 온갖 폐기물을 안전하게 적정 처리하는 시설이지만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의 경우 공익에 준하는 활동을 병행해가며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공헌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제조업인 시멘트업계로의 폐기물 쏠림 현상에도 속수무책으로 속만 끓이고 있는 형편이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
제조합 이사장

산업폐기물 소각업은 안팎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폐기물 처리 산업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35%에 불과함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46.8%까지 부과돼 2030년이 되면 폐기물 소각 산업은 운영비의 절대량을 배출권 구매에 투입해야 한다. 지자체에선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외부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반입해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영업 구역 제한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 실정이다.

만약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백 곳의 폐기물 소각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럴 경우 그 시설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소각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공익 시설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와 공공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 민간과 혼재된 시장으로 인해 경쟁력은 절대적으로 저하될 것이고 쌓여가는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결국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공익 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가 모든 산업을 공공재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산업 간에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공익 시설로 전환하면 공익 전환 대상이 연쇄적으로 거론되게 된다. 수만 개의 폐기물 재활용·처리 시설들을 모두 공익화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가 거론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대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마다 모두 해당 사업이 좌초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 소각 시설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창구로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가운데 이미 십수 년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이 축적된 민간 소각업체로서는 추가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감당 못해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민간 소각업체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조치들이 있어 안타깝다. 시멘트 제조업에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완화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기준으로 인해 무작위로 당겨가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규제만 해도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올해 6월 기준 시멘트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나 줄었음에도 폐기물 사용량은 계속 늘리면서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각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움직임도 문제다. 2030년까지 폐기물처리업인 소각·매립, 하·폐수업자들에게 부과된 온실가스 감축률은 46.8%에 달한다. 일반 산업계는 11.4%의 감축률을 부여한다. 일반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단이 다양하게 내재돼 있다. 그러나 폐기물 소각 시설은 감축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적게 소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스란히 폐기물 처리비로 전가돼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폐기물 처리 시설은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딱하게도 우리나라만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모자라 가혹한 감축률을 부과하고 있다. 딱한 현실이다. 소각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정부도 업계의 주장을 일견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내년까지는 감축률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각업계는 정부 입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원활해지기 위해선 단순히 버려진 물질을 태운다는 이유만으로 소각업을 기피하는 국민 의식도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 일본에는 1000여 개의 소각장이 있다. 거의 동네마다 소각장이 다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소각업이 언제까지 주홍글씨를 낙인처럼 찍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30여 년 가까이 소각업을 영위해온 필자도 끝이 안 보이는 위기 상황에 늘 마음을 졸이고 산다. 한 개의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강이 길을 막고 그 강을 건너면 이번엔 산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신과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업계의 자업자득인 것도 스스로 반성한다. 산업폐기물 소각업계도 국민을 향한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쓰나미처럼 연이어 밀려오는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언젠가 다가올 에너지 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과 이로 인해 국민의 따뜻하고 신뢰하는 시선을 받는 날을 꿈꿔 본다.

[단독] 수도권 지자체들 '소각장 선점' 경쟁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공공 용량 부족해 민간과 계약

박상현 기자

업데이트 2025.03.25. 06:47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자체가 '소각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던 생활 폐기물을 무조건 소각한 후 묻어야 하는데, 공공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소각장과 계약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시 자치구(區)에서 민간 소각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에 처음으로 '다년 계약'이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27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쓰레기 1만1399t을 처리하는 대가로 19억378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의 공고를 올렸다. 이어 송파구도 지난 17일 3년간 쓰레기 3만t을 소각하는 데 67억6500만원을 내겠다고 공고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건 환경부지만, '소각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 건 각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신규 마포소각장 추진이 주민 반대와 소송 패소 등으로 지연돼 공공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직매립 유예"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검토"라는 입장만 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부 구청이 발 빠르게 민간 소각장 용량을 확보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용량도 한정적이라 늦게 계약할 수록 용량 확보가 어렵고, 단가도 올라갈 수 있어 계약을 문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사정상 불가피한 제도다. 그러나 주민 반대를 뚫고 기피 시설인 공공 소각장을 새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본처럼 공공 소각장 뒀던 생활 폐기물을 이미 지어져 있는 민간 소각장을 통해서도 처리하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를 태울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는 소각장에 한해 재활용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각을 열적 재활용으로 인정하면 지자체가 t당 1만원씩 내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아낄 수 있고, 처리 단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더라도 결국 소각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뒤따라야 하기에 소각장 증설이 어려울 경우의 여러 대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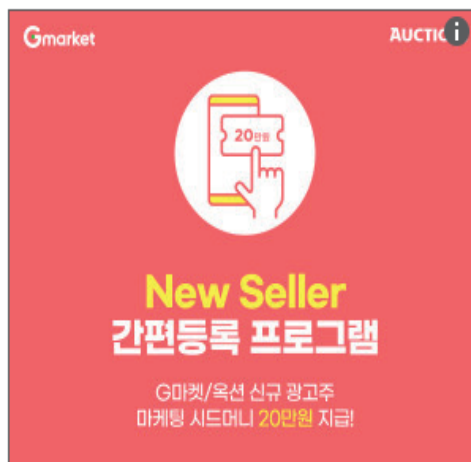
[전문가 기고] 마포 소각장 준공영제로 위기대응 해야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 환경경영학박사 | 승인 2022.10.04 10:15 | 댓글 2

[매일일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현실화 되면서 서울시 등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쟁점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 확보를 위해 마포에 하루 1000t(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배출가스를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하고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자원회수시설지상부에는 전망대형 굴뚝을 설치해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설계 방향이다.

소각시설 상부에 스킵장을 만들고 벽면에 암벽장을 설치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와 같은 명소를 만들어 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조국은 진전된 설계이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 환경경영학박사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

은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자원회수시설에 싸늘한 반응이다. 마포구에는 이미 2005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이 운용 중으로 또 다시 대형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피부에 와 닿는 공감대를 형성시키지도 못했다.

노원, 양천 등 소각장건설에 극렬한 반대운동을 통해 다수의 정치인과 NGO들을 배출시킨 과거가 연상된다.

마포 소각장과 같은 대규모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논의가 점차 불을 지피고 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는 반응이다.

준공영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간 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적 기관에서 재정지원과 공동관리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버스공영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청소, 폐기물처리, 물관리 등 공공의 사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운영방식에서 준공영제 형식을 띠고 있는 사례로 미국 뉴욕시는 공무원인 환경보호국에서 상하수도 전반을 관할하지만 재원조달, 요금결정권 등은 뉴욕 지방물재정청, 요금분야는 물위원회가 조직돼 상호 견제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예산부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주민이 함께하는 준공영제 형태의 사업추진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는 27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각시설도 1세대 개인기업 위주에서 대기업 등 중견기업 이상의 사업체로 전환되고 있다. 민간 소각시설의 최대처리능력 등을 이용하면 연간 최대 50만톤 가량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이 34만t이므로 민간 소각시설의 50만t 가량의 여유용량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지금도 수도권의 민간 소각시설에서 서울시 성동구, 은평구, 광진구 등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민간 소각시설에서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공공의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대규모 운영시설에 대한 공공성, 기여도, 환경성, 공익성, 효율성, 안전성, 재정성 등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얼마 전 필자는 시내버스 준 공영제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민간 소각·매립시설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구분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준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물론 적절한 지역에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상대적 피해와 박탈감을 주는 운영방식은 환경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만 가중돼 전 국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위험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중·장기적 전략보다는 정치적, 지역적 한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굴절돼 공정성과 환경성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신규 소각장 건설만이 내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매몰돼 기존 인프라에 대한 엄밀한 조사 분석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넓은 해안을 가지고 중·장기적 설계를 해야 할 시기다.

대체매립지 확보 불발, 지자체별 신·증설 무산



마포소각장 증설 추진 패소



인천시 직매립 연장 불허 확고



서울시 당초계획 원점 회귀



오염덩어리 시멘트 공장 처리 운운, 국민 갈등 조장



그렇다면 최적의 해법은?

최 적 해 법

- 44년간 수도권 지역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배후기지 수행
- 선진국을 능가하는 처리기술, 세계최고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현재도 공공시설 용량 초과로 처리 못하는
생활폐기물 묵묵히 처리대행하며 쌓여진
노하우 충분
- 先 → 님바·혐오시설 신·증설 고민없이 기존
시설 우선 활용
後 → 공공시설 확보되면 자체 처리로
서서히 전환

〈 민간 위탁 시 여유용량 〉

- ▶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일처리 기준 약 2,894톤으로 서울에 신규 소각장 설치 없이도 전량 처리가 가능

〈 민간 위탁 시 경제성 〉

- ▶ 마포소각장(1,000톤/일) 신규 설치 시 약 20년간 약 2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소각장 활용 시 약 1조 200억원으로 약 1조 3,800억원의 비용을 절감

〈 민간 위탁 시 안전성 〉

- ▶ 민간 위탁에 따른 처리비용 및 처리거부 등의 문제는 처리 비용 인상폭 제한과 장기계약, 조합 책임보증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며, 민간소각장의 경우 대기기준, 관리기준 등이 최고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성 및 처리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있는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과 정부가 봉착한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토 론 1 】

이제훈 과장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직매립 금지 제도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

이제훈 과장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1. 제도개요

- (도입배경)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일환으로 생활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방향성 합의('15.6, 환경부장관.수도권 3개 시.도지사)
 - (내용) 국토의 효율적 활용, 탄소중립 등 위해 소각,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 허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시기) 수도권 `26.1월, 비수도권 `30.1월 시행
 - (예외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 시설의 규모·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적용유예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예산 반영,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완료 이후

2. 주요 추진경과

- '15.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직매립금지 방향성 합의(4자협의체)
 - * (4자협의 내용中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 개선 내용)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건설폐기물 감축, 폐기물 수송도로 개선 등 추진
- '20.1월,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 '21.6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기('26년~) 및 유예규정 등 합의(4자협의체)
 - * '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되, 소각장 건설을 진행 중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매립을 연장(1년 이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 합의
- '21.7월, 직매립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붙임 참고)

□ '22.1월, 수도권매립지 대형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시행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만톤) : ('18) 312, ('19) 288, ('20) 250, ('21) 242, ('22) 130, ('23) 79, ('24) 68

3. 생활폐기물 발생 및 직매립 금지 준비현황

□ 생활폐기물 발생현황(2023년 기준)

- 직매립금지 이행을 위해서는 일 8천톤에 달하는 매립량을 소각처리 또는 감축 및 선별처리 등 필요

※ 직매립 금지시행시 소각시설 보수·정비기간 물량도 별도 소각 후 매립 필요

<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톤/일, 연간 300일 기준) >

구 분	폐기물 발생량	소각량			매립량	기타
		계	공공	민간		
계	74,709	18,261	14,503	3,758	7,966	48,482
수도권	36,406	8,504	6,891	1,613	3,213	24,689
수도권 외	38,303	9,757	7,612	2,145	4,753	23,793

□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제도개선 및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 주민편익시설 지원 규모 상향(공사비의 10% → 20%),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비율 확대(10%→20%), ('20.12월, 폐촉법 시행령)
- 투명한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위한 집행 실적 제출의무 강화('24.3월, 폐촉법 시행령)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설치시 표준단가의 1.4배까지 상향지원('19~)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소각시설 예산 지속확대('23년 809억원 → '24년 904억원 → '25년 1,502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 표준단가 인상을 통한 현실화('23)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자동선별기 도입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비 지원('18~)

* 종량제봉투, 선별 잔재물 등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 소각·매립량 감축

□ 지자체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신·증설, 대체, 대보수)

-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직매립량 3,213톤/일('23) 대비, 총 27개 소각시설 확충사업 추진 중

※ 선별시설 신증설, 재활용거점 분리배출시설, 소형 사업장폐기물 배출관리 등 병행

- (수도권 외) 14개 시도 162개 지자체 직매립량 4,753톤/일('23) 대비, 79개 지자체 확충사업 추진 중

⇒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시설확충 사업이 '26년 이후 완료예정

※ (참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주요 추진절차 및 최소 소요기간 (8~10년)

법정계획, 입지선정	예타면제, 적정성 검토	예산협의, 투자심사	기본·실시설계, 인허가, 설치승인 등	시설공사 입찰	시설공사
2년	1년	6개월	2년	6개월	2~3년

4. 직매립금지 제도의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지자체별 공공시설 확충 사업 추진현황(입지선정, 재원확보, 인·허가 상황 등)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민간시설 운영현황, 지역 간 폐기물 이동 및 수용성, 폐기물처리 관련 업계(재활용 등) 및 타 산업계(제조업 등) 영향
- 공공 매립지 매립현황, 직매립량 최소화 방안
- 지자체별 조기 제도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방안

□ 향후 계획

- '26년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 및 예산확보 등 일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합리적인 제도 시행방안 마련, 지자체 협의 등 거쳐 확정·시행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7) 1)부터 6)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헝잡물(挾雜物)·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토 론 2 】

김경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김경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는 2026년부터 실시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될 과제임.
- 국회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2022년 12월 27일부터 명확히 실시하고 있음.
 -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발생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금번 토론회를 고려한다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동조 제2항에서 발생지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이외 지역의 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토론회 자료를 검토해 본다면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경기도와 인천시 민간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발생지인 서울시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소각, 인천시에서 매립되는 방안에 대해 이외 지역의 단체장과 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중 소각시설로 이동하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이며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의 성장과 흡사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라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분류할 수 있어 매립지의 문제는 소각시설의 문제이고, 이 두 문제는 재활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를 재활용 정책의 실패라 볼 수 있으며 개별 지자체의 재활용 정책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몫이라 할 수 있음

□ 환경부는 2021년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 주도로 권역별(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강원 등)로 1개소씩 설치를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입지가 확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금번 토론자료를 통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함

- 첫째, 생활폐기물의 처리지역인 서울시에서 처리 외 지역인 경기도나 인천시로의 폐기물 이동 가능한지에 대한 처리 외 지역의 협의가 가능할지 여부
-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를」에서 말하는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민간소각장이 해당될 수 있는지 이 경우 동법에 따라 주민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셋째, 수도권매립지 폐쇄가 예정된 2015년 6월 이후 지자체의 재활용, 소각, 매립정책에 대한 환경부의 로드맵이 있었는지 여부
- 넷째, 환경부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지정여부
- 다섯째, 재활용 정책의 실패 대상 지자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 여섯째,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던 정책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

【 토 론 3 】

성은경 위원장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마포추가소각장 건설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성은경 위원장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2022. 08.31.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후보지를 마포구로 단독 발표하고, 이후 정확히 1년 만인 2023. 08. 31. 마포를 소각장 입지로 결정고시합니다.

소각장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입니다. 마땅히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상가상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실제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2023.11.20. 마포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했고, 2025. 1. 10. 서울행정법원은 소각장 입지결정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3년이상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2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서울시는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이 2020.12.10. 시행된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시행령 개정 전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 위촉은 2020.12.15.에 완료되었다는 것이 명료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들은 전부 위법합니다.** 이런 명백한 법령 위반은 항소를 한다고 달라질 수 없으며, 시간과 세금낭비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 위법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엄청난 세금낭비를 했습니다. 사법부가 절차적 위법을 확인 한 이상, 더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2. 서울시가 또다시 마포를 신규소각장부지로 선정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입니다.

마포에는 이미 기존 750톤의 소각장이 설치되어 매일 서울시 5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또다시 1,000톤의 소각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서울시 쓰레기의 55%인, 1,750톤의 쓰레기가 매일 한 지역에서 태워지게 됩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현재 4개 구에서 소각장이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소각장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입지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가 서울시에 36개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여 도출한 <2021 서울공론화 결과보고서>에서도 광역자원 회수시설 확충 시 입지조건으로 **‘기존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곳은 피할 것’** 이라고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 선정시, 자의적으로 비상식적인 평가기준들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이 또한 실제적인 위법사안들로 소송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서울시는 미리 소각장입지를 마포로 염두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마포는 서울시 행정의 부재와 직무유기의 희생양입니다.

소각장 문제는 단지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촉법상 3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 개발시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동지구, 마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폐촉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안일한 행정을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근본적인 행정부재를 마포구에 전가하는 일이며,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4. 서울시의 거짓 행정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재난

위법적으로 선정된 마포의 신규 소각장 입지는 지하 22미터까지 쓰레기가 묻혀있는 매립층으로 사실상 소각장 전면 지하화에 무리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소각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거짓 선전으로 주민들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전면 지하화 계획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 입지는 4면 중 2면이 수소충전소와 수소발전소로 맞닿아 둘러싸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재해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소는 가연성과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큼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각장의 화재가 만약 인접한 수소 충전소 및 발전소로 확산될 경우 상상하기도 끔찍한 재난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건설 당시 철새도래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구시대적인 폐기물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신은 재활용을 하고 악마는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소각은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업체 규제, 재활용률 향상, 재활용 선별, 종량제봉투값 인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각은 가장 쉬운 처리 방식이지만, 환경적으로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직매립 금지의 대안은 소각장 건설이 아니라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938만의 서울 시민들이 매일 라면 한 봉지보다 가벼운 쓰레기 100g씩만 줄인다고 가정한다면, 938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소각장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은 지침과 국가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계산된 시설 규모입니다. 지침에 맞는 통계를 바탕으로 재산정하여 계산한 결과, 1000톤의 소각장 규모가 과대하게 정해졌으며 나아가서는 소각장을 짓지않아도 된다는 연구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의견서로 제출되었고,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에 소각장의 시설규모 산정방법과 근거 및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면한 기후위기와 당면한 쓰레기 문제 앞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초대형 소각장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의 순간입니다.

【 토 론 4 】

김선홍 회장
글로벌에코넷

「택밀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김선홍 상임회장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30여년 인근지역 주민피해,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종료되어야 한다.

□ 수도권 매립지가 주변 지역에 끼친 영향

- 1992년 2월부터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고 30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은 온통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이 조성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 글로벌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매립지 인근 인천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일명 쇳가루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피해 지원 활동
- 1992년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부터 매립지 수송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침출수, 악취, 소음과 환경적 문제점을 지적.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

- 세계 최대 수도권 매립지 매립 시작 후 주변 지역 환경 유해시설 집중화 현상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집단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

▲3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 톤(18t 덤프트럭 8십 3만 대 추정)

▲쓰레기 수송로

▲오류동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검단 일반산업단지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조성

※ 지난 30여 년간 주변 지역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 끼친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해야 한다!

-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
-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문제가 더욱 심각, 2022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억 8,645만 톤이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9.0%를 차지

○ 문제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 하는데, 필요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 주로 시설 건립 지역주민들의 반대(님비 현상) 때문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나 소각장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태

□ 기존 정책의 현황과 한계

- 정부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22년 기준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86.8%로 가장 높은 비율
-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종류가 많고,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실제 재활용률이 낮은 경우와 또한, 소각 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

□ 현실적인 대안 모색

-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돼야 함.

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무엇보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 개인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필요.

② 소각 시설 확충 및 민간소각 활용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은 필수적인 처리 방식 소각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거나 민간소각 시설의 활용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③ 자원회수시설 활성화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도 생산할 방법

- ※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주민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폐기물 정책

- 기후위기 시대에는 폐기물 문제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발생 자체를 줄이고 최대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 사회로 나아가야 함.
- ※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
-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수적 사항임.

쓰레기 문제 해결은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고, 향후 폐기물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수립되어야 한다

【 토 론 5 】

백진기 회장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백진기 회장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현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검단지역의 주민인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 백진기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 직접영향권인 인천서구검단에 거주하며 지역주민단체를 맡고 활동하며, 그간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종료를 위한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등 지속적인 활동해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활동 보다 현실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년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인하여 인천 서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명확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국가적 계획 수립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정부는 뒷짐만 지고 방관자적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 플랜을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 특히 서구지역 및 검단지역은 30년간 수도권매립지가 운영되면서 환경적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0년간 남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균형발전입니다.

그간의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사람이 살수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을 대표하여 수많은 피해사례와 30년간의 지속적인 현재까지의 상황은 수도권매립지 하나로 검색하면 엄청난 자료가 나오나 본 토론회에서는 제게 주어진 시간 제약상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이번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를 현 수도권매립지 직 접영향권 주민으로서, 또 인천시민으로서의 입장에서 현안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천 시민들 및 지역 주민들의 판단은 이번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패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100번을 해도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될 것 같았으면 1~3차 공모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을 것이나, 그런 움직임이 전무합니다.

이 대체매립지가 주민들이 수용하기에 좋은 시설이고, 훌륭한 시설이고,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좋은 보탬이 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어느 지역이라도 경쟁적으로 나서겠지만, 기존의 이 방식으로는 100번을 해도 공모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민 특히 현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인 우리 서구 검단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매립지 확보에 좀 애를 태우고 있는 건 서울시도 경기도도 환경부도 아닌 오로지 인천시죠. 반면,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는 그저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똑같은 상황이 매년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당 정부인지를 막론하고, 정부 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때만 되면 임기 안에 종료하겠다, 해결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매립지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등 온갖 공약을 내세우지만, 전혀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인천시 역시도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계속 ‘4자 협의체’라는 서울·경기, 그리고 환경부와 얘기는 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간 몇 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구 정치권 외에는 현 정치권 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종료의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특히 이번 환경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를 못 하면 계속 잔여부지를 써야되겠다는 몰지각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으로서나 지역주민으로서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정치권 모두 의지 자체가 없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것 같으니,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좀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저 인센티브만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는 안 됩니다. 특히 대형면적의 광역매립지는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직매립의 기준으로 문제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이유는 그간 여러 정부나 정치권이나 전임시장, 현임시장이나 모두 다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국가가 한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여의치 않으면 연장을 하겠다는 등 잔여부지를 계속 쓰겠다는 등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 수도권매립지 만큼은 주민 수용성이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선진국형 시설이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간 직매립으로 엄청난 환경피해를 본 학습과 경험을 한 현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 주민들과 재산권 가치를 우선으로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주민 수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자원순환센터 등 선진화된 시설들이 평택이나 하남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되고 있는 곳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10년 전부터 정부가 노력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되는데, 2016년에 종료되었어야 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당시 4자 합의로 본 매립지를 10년 연장만 하고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히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그간 30년 동안 후진국형으로 매립이 되면서 지역주민한테 환경 피해를 많이 줬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 주민수용을 하려면 보다 많은 홍보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대규모 매립지보다는 쓰레기를 100% 소각할 소각장을 지자체별로 빨리 확보해서 해당 지역별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이렇게 큰 매립지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에 소량의 재만 묻으면 되는 소규모 작은 면적의 매립지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의 쓰레기를 이렇게 계속 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이나 발전전략 없이 오로지 그냥 발생하는 쓰레기를 편한 곳에 계속 매립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인천시 시민들, 해당 주민들은 정부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3차 공모마저 실패를 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와같은 인센티브 보상 차원의 방식으로는 현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부터 공식적으로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급히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침을 세우고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쓰레기의 자원순환이나, 지구 환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이런 넓은 면적의 쓰레기를 묻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로 깨끗하게 전체 소각을 하고 재활용을 높이도록 하고,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에는 충분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랜드마크가 되는 등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시설들, 그런 걸 본보기 삼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 수용성 충분히 형성됐을 때,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고, 현재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매립하는 곳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고, 선진국처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진정 우리 인천 시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시고, 각 언론사 기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쓰레기정책 대체매립지 확보의 필요성 등 복잡하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 시점으로만 보아서 단순하게 내 지역에 내 집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다들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 론 6 】

임창순 사무국장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과 시멘트 벨트 주민들의 입장 및 제안

임창순 사무국장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임창순입니다. 오늘 '턱밑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을 주제로 한 귀한 토론의 자리에 함께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선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의 여러 측면이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멘트 벨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 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멘트 벨트 주민들의 입장

저희 시멘트 벨트 주민들은 인간 활동의 필연적 부산물인 쓰레기를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마주한 현실은 이로 인한 피해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부담 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삶의 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왜 시멘트 벨트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해답과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폐기물 처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유해 물질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은 그 이윤 추구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2.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기본 전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원인유발자 책임 원칙입니다. 쓰레기를 발생시킨 주체가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원인 제공 지역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가 차원의 처리 방법 및 공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소각이나 재활용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산적이고 형평성 있는 처리 시스템 구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3.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이러한 전제하에, 시멘트 벨트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는 독일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멘트공장 인근 1km 공간 확보 및 주민 이주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경계로부터 최소 1km 이내의 공간을 비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이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및 단계적 안전 공간 확장
확보된 1km 이내 공간에 태양광 발전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안전한 범위의 공간을 4km까지 확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이주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셋째, 시멘트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기준 강화가 필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인 소각장 주변 주민들도 환경오염으로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현행 230ppm 배출을 적용하는 법정 기준은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4. 맺음말 및 결론

쓰레기 문제는 특정 주체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시멘트 벨트 주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실을 직접 겪어왔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단순한 요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핵심인 직매립 금지가 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시멘트공장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일부 몰지각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

또다시 시멘트 벨트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준화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시멘트공장 주변에서 살아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려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시멘트 벨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지혜를 모아 '턱밑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토 론 7 】

한달수 기자
경인일보

공공 처리 앞세워 민간소각장 떠넘기나… 환경부 ‘반입협력금’ 속뜻은

2025-05-04 10:58 수정

민간소각장 관리에 초점 맞춘 반입협력금
폐기물 물량 확인 선행돼야 비용 부과가능
환경부 “법적근거 없다” 답변에 파악 못해
반출 지자체 시행원칙 지켜질까 미지수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처리하는 쓰레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면 불안이 더 커지겠죠. 소각장이 없는 지역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역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매년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바로 ‘반입협력금’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도입했죠. 발생지 처리 원칙은 표현 그대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지자체가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쓰레기 처리량 알 수 없는 ‘민간소각장’ 관리 위한 반입협력금 제도

하지만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당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없으니, 다른 지역의 소각장에 이용 요금을 내고 처리를 위탁하는 구조죠.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지자체(반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지자체(반입 지자체)에 이용 요금과 별개로 내는 비용이 바로 반입협력금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소각장이 없는 서울 송파구가 인천 남동구의 공공소각장 또는 민간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소각장에는 이용 요금을, 남동구에는 반입협력금을 내는 방식이죠.

반입협력금 제도의 취지는 사실 민간소각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은 관할 지자체가 직접 설치와 운영을 도맡는 만큼 반출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폐기물 물량과 처리량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죠. 반면 민간소각장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반입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려면 관할 지역 민간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출 지자체의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처리량에 따라 반입협력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소각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셈입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이라는 ‘페널티’를 걸어 자체 소각장을 확보하게끔 유도하는 취지도 포함됐죠.



송도소각장. /경인일보DB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시행 유예? 제외?... 오락가락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반입협력금 시행 대상이 ‘공공소각장’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지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간소각장 대상 시행은 3년을 유예한 2028년 1월1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명시했는데요. 당시 환경부는 공공소각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은 또 다릅니다. 반출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에 보낸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 4조와 5조의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입협력금 시행 대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 민간소각장들이 타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소각장은 제외됐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연평도 소각장 전경. /경인일보DB

■민간소각장 배제된 반입협력금 제도는 무용론

반입협력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간소각장이 시행 대상에서 배제되면 소각장이 없는 반출 지자체들이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소각장에만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면 반출 지자체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타 지역 생활폐기물 규모를 알 방법이 없는데, 이런 구조를 활용해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서구울) 국회의원도 지난해 반입협력금 시행을 앞두고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전국의 민간소각장을 대상으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공유받는 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 등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